Weekly 공감

2011.02.16 NO.97
gonggam.korea.kr



이명박정부 3년

공정사회·국격상승 진화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올 겨울은 참으로 춥습니다. 30년 만의 추위라고 하지요. 하지만 정말 우리를 춥게 만들었던 것은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말 겨울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겨우 두 해 전 일입니다만, 돌이켜보면 마치 거대한 파도 속을 뚫고 지나온 듯합니다. 그해 겨울부터 미국의 모기지론 부실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명박정부는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하고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등 금융시장 안정책들을 내놓았고, 실물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재정 확대정책을 폈습니다. 수출과 투자의 위축에 대응한 지원체제를 가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취약한 국가로 평가를 받던 우리나라는 2009년 봄부터 회복국면에 들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세계의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위기의 격랑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됐습니다.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모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008년 12월 처음 열렸습니다. 세계의 경제 중심축이 주요 7개국(G7)에서 신흥국이 참여한 G20으로 이동하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우리나라의 위상은 한 단계 위로 성큼 올라섰습니다.

정부가 2009년에는 경제위기 탈출에 급급했다면, 2010년은 되살린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 위기 극복의 온기를 고루 확산하는 데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을 겪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6퍼센트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뚜렷한 회복국면에 들어섰습니다. 2010년 말에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가 바라는 선진일류국가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2008년 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올 겨울 날씨만큼 추웠습니다. 이명박정부는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하고 재정 확대 등 신속히 지원체제를 가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의 그늘진 곳을 돌아보며 소외된 이들이 없고,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였습니다.

공정한 사회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짧은 기간 동안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하느라 그냥 지나쳐온 불합리함과 불공정을 해결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사회적 이념이 바로 공정한 사회입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차별이 되지 않고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선진국의 뒤만 좇아가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범을 삼을 나라는 이제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그 온기를 사방에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제는 '다함께 성장'을 목표로 우리 경제의 체력을 굳건히 다지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시동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물론 평탄하고 쉬운 길만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 경제 환경과 우리나라 주변 정세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경제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미국과 더불어 'G2'로 불리는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3번째 교역국이기도 한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흥강국으로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등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중국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여론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극명하게 드러난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평화와 번영을 희망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화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이 경주돼야 하겠지만, 선진강군(先進强軍)이 절실합니다. 미래의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 기반 마련도 과제입니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처도 우리 세대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약자를 배려하고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차별이 되지 않고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경제강국에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정부는 올해 5퍼센트대 경제 성장과 무역수지 1조 달러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경제강국에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이러한 성장의 결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아이를 맡기고, 어느 집 아이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출발선에 서기조차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이번 겨울은 구제역 한파로 인해 더욱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구제역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공직자와 축산인들이 우리나라 축산 산업의 미래를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농촌마을에 맑은 워낭소리가 울리고, 주인 잃은 축사에 생명이 넘치도록, 나아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근본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서로를 보듬고 안부를 물었던 설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족 사랑으로 지펴진 가슴 속 따뜻한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중심국가로 비상한 대한민국이 이제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나라 안팎으로 내실을 다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 때입니다.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노력은 어느 한순간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G

Contents

2011.02.16 NO.97 통권 198호
http://gonggam.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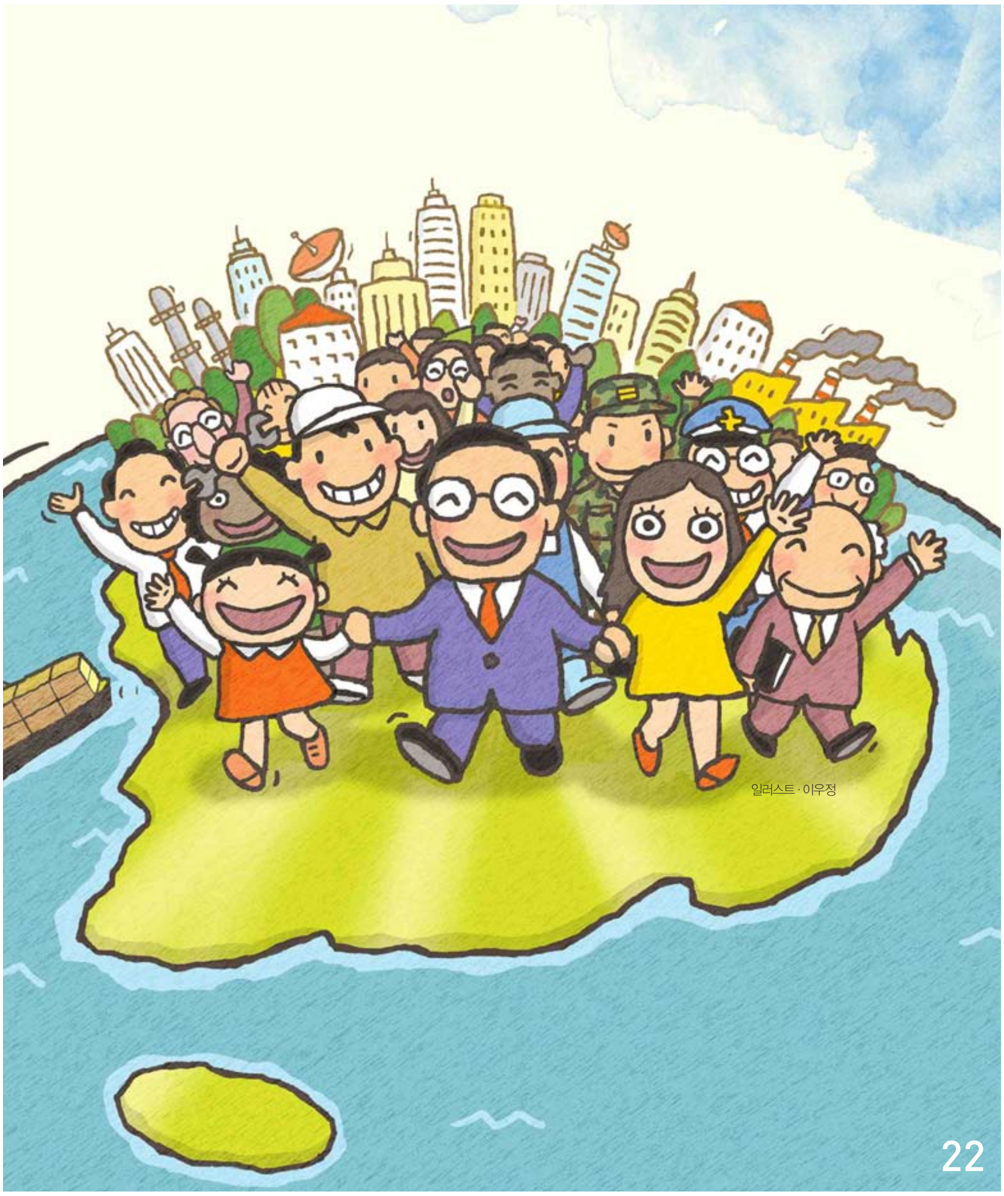
표지 이야기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난 2월 9일 경북여고 교정에서 깔끔한 졸업 가운 차림의 졸업생들이 모자를 하늘로 날리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 · 연합

발행일 2011.02.1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주)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일러스트 · 이우정





기획특집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하여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3년은 위기와 극복,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경제성장률은 회복했고 세계 7대 무역대국에 올라섰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장에 바빠 지나쳐온 그늘을 없애야 합니다.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 더 큰 대한민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54

공 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96호(2월 2일자) 기획특집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많은 독자가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 사회적 약자에 채용 길 넓혀

"우리 사회에는 어둡고 고되게 살아가는 계층이 상당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새터민,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삶은 정상인과 보통 사람보다 어렵고 힘들며 취업하기는 더욱 힘듭니다. 정부가 이들을 먼저 채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처럼 채용 시 사회적 약자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분배하고 배려하는 풍토가 모든 기업으로 확산되어 이들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공동체임을 인식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우도형**

▣ 제2인생을 위한 일자리 늘려 줬으면

"이번 특집기사를 보며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은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올해는 경제가 활성화되어 민간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제2인생을 위한 일자리도 많아졌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경숙**

'공공부문 일자리 55만5천 개 70퍼센트는 취약계층에게'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의 상당 부분을 취약계층에게 돌린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업에서도 정부의 이런 취지를 잘 도입해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병순**

'소통 칼럼-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를 보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나를 위해 회초리를 들자'라는 칼럼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올해를 작년보다 더 밝고 즐겁게 보내려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 타인에게 아픔을 주진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매를 들어야겠습니다." **이서현**

'故 박완서의 삶과 문학'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평소 박완서씨의 저서를 열독한 독자로서 이번 기사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불혹이란 늦은 나이로 문단에 나온 박완서씨는 지천명도 넘어 수필가로 등단한 저에게 더욱 살갑게 다가오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홍경석**


한국도로공사 '일자리 나눔' 앞장
사회적 약자에 채용 길 넓혔다


공공부문 일자리 55만5천개 70퍼센트는 취약계층에게

알립니다

대한민국 '훈남훈녀'를 모집합니다



국가보훈처 대표 블로그 〈대한민국 훈훈한터〉, 일명 〈훈터〉에서 '훈남훈녀' 3기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글쓰기를 좋아하고, 적극적인 취재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활동 시기는 올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다.

접수 기간 | 2월 27일까지
모집 인원 | 15명 내외
결과 발표 | 3월 8일 예정, 블로그 게시 또는 개별통보
지원 혜택 | 훈남훈녀 3기 블로그 기자단 임명장 수여, 국가보훈처장상 수여 및 포상,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 지급
접수 방법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지원서 받은 후 이메일 접수 (hunhun-story@hanmail.net)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 02-2020-5415
국가보훈처 대표 블로그 훈터(mpva.tistory.com)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 공모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공평한 기회제공, 공정한 경쟁 구현, 약자와 서민 배려 등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접수 기간 | 2월 28일까지
접수 방법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www.epeople.go.kr) 특별공모제안 코너를 통해 신청서 접수
지원 혜택 | 우수 제안자에게는 각급 행정기관장 표창 및 부상금 지급 대통령표창(부상금 5백만~8백만원), 국무총리표창(부상금 각 3백만원), 행정안전부장관표창(부상금 각 1백만원) 수여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 02-2100-3410, 3406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9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2월 22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1. 물품이나 기술, 돈 등으로 도와주는 것. ○○국이 됐다.
3.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 교육은 ○○를 만들지요.
5. 높이뛰기, 멀리뛰기, 창던지기 등의 운동경기를 할 때, 구름판까지 일정한 거리를 달리는 일.
7. 맹세하고 약속함. "○○을 지키다." "○○서를 쓰다."
9. 한국의 대중음악 공인 차트(순위표). 미국에 빌보드차트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세로

2. 서로 약속하여 만든 문서에 도장을 찍음. 국제법상 조약 체결 때 조약문에 동의하여 서명하는 일.
4. 다시 한 번 뛰어오름. 다시 한 번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함.
6.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생활의 ○○을 다졌다."
7. 붓글씨를 직업적으로 쓰는 예술가.
8. "대한민국은 동계 스포츠에서 ○○트랙뿐 아니라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Weekly 공감〉 95호(1월 26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2** 구제역 **4** 마개 **5** 토끼 **6** 송아지 **7** 왕눈이
세로 **1** 광개토대왕 **2** 구정 **3** 역지사지 **6** 송이 **8** 눈썹

〈Weekly 공감〉 95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규민 ·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김화영 · 부산시 남구 우암1동
박종원 · 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
전예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조준수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 ⑬

장애인, 컴퓨터 그리고 선진사회

이상묵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조선DB

저는 척추장애인입니다.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장애인을 대표해서 '나는 희망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쑥스럽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희망보다는 기술을 통해 웬만한 신체적 장애는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증 장애를 가졌지만, 장애를 입기 전과 비슷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마우스와 음성인식 프로그램 덕택입니다. 제가 말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문장을 받아 적어 줍니다. 단, 영어에 관해서만 말이죠. 다행히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한 덕에 영어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불편 없이 글을 보내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책도 스캔을 해서 컴퓨터에 띄워 놓고 책장을 넘기며 봅니다.
시험도 학생들이 A4용지에 답을 쓰면 조교가 스캔을 해서 저에게 줍니다. 이처럼 사이버상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글 음성인식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수익가치가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저는 음성인식 프로그램이 한글화되면 정말 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장애인 학생이 60여 명 있는데 80퍼센트가 문과생입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이공계 국가라고 하는데 왜 장애인들은 문과로 갔을까요?
지금까지는 '과연 장애인이 이공계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제의를 했고, 현재 정부 국책사업으로 이공계 장애인을 돕고 교육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을 널리 알리고,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세대 만에 고급사회로 발전했습니다. 물질과 환경은 금방 바뀔 수 있지만 사람의 의식은 몇 세대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한 세대 만에 놀라운 발전을 기록했지만 의식은 아직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성장, 스마트코리아 정책이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녹색의 이면에는 '따뜻함', '가족 외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정신적인 가치 창출', '시민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는 G20 이후에도 변화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정리 · 이미령 인턴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0년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대(對)국민 강연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의 세부 내용을 '공감코리아(www.korea.kr)'에서 발췌 요약해 연재합니다.

공감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박일호 서울 노원구 월계2동

1. 중점기획 '지금은 서민복지가 우선'을 가장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화두가 '복지'인 만큼, 4대 보험에 대한 비교기사 및 다른 나라의 복지정책 사례 등을 비교하며 한국형 복지에 대한 대안제시 등이 돋보였습니다.
2. 최고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새해 들어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도는 것 같아 다행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책 추천 코너를 매주 꼭 읽는데, 독자들이 직접 쓴 서평을 소개하는 지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선 인천시 서구 석남1동

1. '4대강살리기-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기사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강은 부활, 금강은 치유, 영산강은 여유, 낙동강은 풍류를 콘셉트로 문화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인 '문화관광 활성화 계획'이 올가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4대강이 문화관광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2. 55만5천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가슴을 훈훈하게 합니다. 이 중에서 약 70퍼센트의 일자리를 취업취약 계층에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이 반드시 성공하리라 기대합니다.
3. 독자들이 쓴 시, 수필 등의 작품을 다룰 수 있는 지면이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독자의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2월 17일(목)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공감마당'에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 기사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떼는 순간 **산소**가 됩니다.

일회용 비닐봉지는 연간 1억 9천 100만개가 사용됩니다. 무게만 해도 3820톤에 달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7100t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일은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더 늦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해빙기 매몰지 수질오염 선제적 대응

정부, 1차 예방접종 마무리… 모든 수단 동원 사후관리와 2차 접종계획 점검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방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몰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한 매몰범위와 가축의 수매 및 이동 제한을 해제하는 기준도 조정된다.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매몰처분된 가축에 대한 후속조치가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7일 관계부처와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매몰지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무엇보다 봄철 해빙기가 다가옴에 따라 식수원 오염 등 환경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의 매몰지 사후관리 추진상황과 2차 백신 접종계획도 점검했다.



조선DB

정부는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매몰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매몰지로 인한 수질오염이 없도록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제역 가축의 매몰지는 9개 시도, 76개 시군에 걸쳐 전국 4천54곳에 달한다. 매몰처분된 가축은 소와 돼지를 합쳐 2백92만 두에 이른다. 조류 인플루엔자(AI)로 매몰처분된 닭과 오리는 5백만 두로 추산된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수 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1일 매몰지 관리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일반 매몰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복토, 가스 및 침출수 유공관 보완 비닐덮개 및 관 측정 설치 등 보완과 정비 작업이 그것이다.

매몰지 관리 TF팀 운영 등 체계적 관리 나서

우기에 대한 조치도 수립됐다. 붕괴와 유실 가능성이 있거나 침출수 유출로 상수원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사면 안정성 보강, 옹벽·차수벽·우수차단시설을 설치한다. 필요할 경우는 매몰지를 이동시키는 등 우수기 이전인 3월 말까지 보강과 정비를 마치기로 했다.

매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마을의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매몰지 주변 상수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의 매몰지 관리 기본계획은 충분한 사전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정해졌다. 먼저 상수원 상류 지역 인근의 매몰지에 대한 정부 합동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89개 매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45개 매몰지가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조사도 실시된다.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경기와 강원, 충청북도 등 한강 수계 지역의 부실 우려가 있는 매몰지를 조사해 우수기 이전인 3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정비한다. 또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의 매몰지에 대해 정부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GPS를 활용해 매몰지의 위치 정보를 파악, 그 결과를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SGIS)에 등재해 관리할 계획이다.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영향 감시도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매몰지 주변 관정에 대한 지하수를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하수 종합조사의 일환으로 매몰지 주변 3백미터 이내의 관정 3천 개소에 대해 암모니아성 질소 등 4개 항목에 대해 분기 1회씩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수원 상류와 오염 우려 매몰지 관정 1천 개소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추진된다. 병원성 미생물 등 7개 항목이 조사 대상이다.

식수원 보호 위해 시급성 따라 예산 집행

부실 매몰지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됐다. 3백여 개의 부실 매몰지를 선정해 침출수 특성과 19개 항목의 수질을 분석하고 토양 및 매립가스를 측정하기로 했다.

매몰지 주변의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추진된다. 유용미생물(EM)에 대한 검증 사업을 2월 중에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매몰처분된 가축 매몰지의 사체 분해기술 등 매몰지 조기 안정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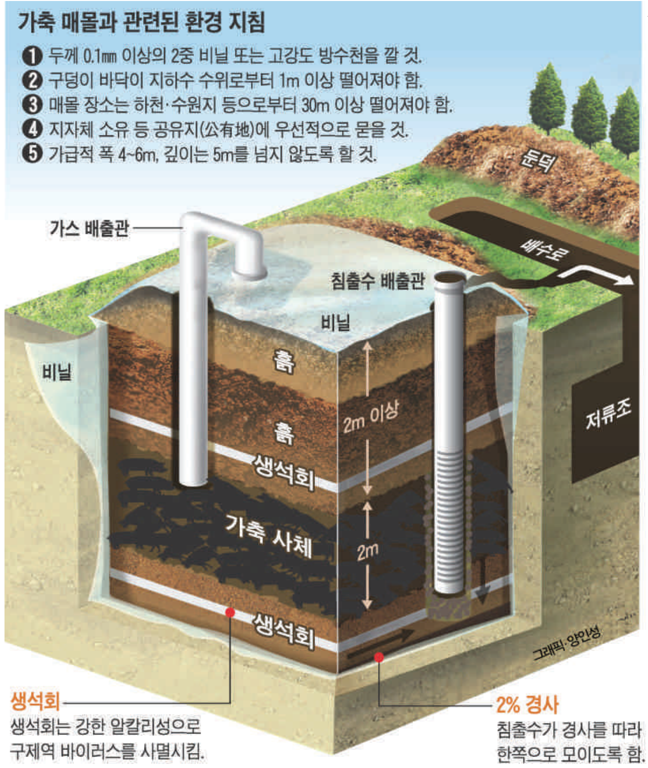
매몰지 주변 주민들의 식수 대책은 진작부터 실시되고 있다. 경상북도 안동시 등 17개 시군 5백84개 마을에 상수도 보급사업을 위해 8백57억원을 지난해 12월 지원했다.

추가 매몰지의 상수도 보급 예산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방안을 수립해 예산당국과 지원 규모를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매몰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매몰범위와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의 수매 및 이동제한 해제 등에 대한 기준도 조정됐다. 소의 경우 예방접종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암소에게서 태어난 송아지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만 매몰할 수 있다.

이동제한 해제 기준은 축종별로 적용된다.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3주 경과 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2주 후 임상검사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해제된다. 해제 기준일이 지났다고 이동제한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군별로 구제역 발생상황을 검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야 이동제한을 풀기로 했다.

사료의 유통에 대한 기준도 조정됐다. 이동제한이 해제되기 전이라도 사료공장이 위치한 시도에는 유통을 할 수 있다.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났다면 축종별로 사료수송차량을 구분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DB

도축은 도축장 반경 3킬로미터 안에 구제역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3킬로미터 안에 구제역 발생농장이 없으면 해당 시도의 가축을 자유롭게 도축할 수 있다. 반면 구제역 발생농장이 있다면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의 수매분에 한해서만 도축이 허용된다.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기준이 좀 더 엄격하다. 이동제한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이동제한 지역 내의 공공처리장과 공동자원화시설을 활용하도록 했다. 지역 내 시설에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시 간이 저장조를 설치해 줄 계획이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 소와 돼지에 대한 항체 형성 여부를 조사했다. 소는 백신접종 후 2주가 지나면 1백퍼센트 항체가 형성됐다.

돼지는 기간별로 결과가 달랐다. 2주 경과 후엔 60퍼센트, 3주가 지나면 80퍼센트가 항체가 생겼다. 다만 2차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1백퍼센트 항체가 형성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충분한 양의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전과 다름없는 철저한 차단방역을 농가에 당부했다. G

글·변형주 기자



서울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자 정부는 2011년 2월 11일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과 서초의 아파트 단지들.

전세대출 8천만원까지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기 공급도

정부는 지난 2월 11일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저소득층 서민·근로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주고,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임대주택 조기 입주 등 1·13 대책의 조속하고도 지속적인 추진 방침도 함께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도 최대 20퍼센트까지 상향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안정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전·월세 시장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지원되는 전세자금이 대폭 확대된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가구당 지원한도를 현행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리는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하향 조정했다.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1억원짜리 전셋집까지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8천만원짜리 전셋집까지만 가능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8천억원에서 올해는 7조원 규모로 늘렸다. 필요시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와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현재 매입임대주택 세제 지원 대상은 서울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3억원 이하)을 5가구 이상 10년 동안 임대사업을 할 경우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1백49제곱미터 이하 주택(6억원 이하) 3가구 이상을 5년간 임대할 경우에도 세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모형 리츠 등 투자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도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민간 미분양 주택의 전·월세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양



조선DB

2011년 2월 9일 오후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표시란이 최근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전셋값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최대 50퍼센트 감면해 준다.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도 50퍼센트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 30일에 종료된다.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민간 건설업자들 지원금 상향 조정

민간 건설업자가 주택기금에서 지원받아 짓는 5년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한도를 가구당 7천만~9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2퍼센트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은 지원한도가 가구당 5천5백만~7천5백만원, 지원금리는 3~4퍼센트 수준이다.

이와 함께 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도 3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늘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한편 신혼부부 등 2인 가구의 수요도 흡수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1만 가구 건설이 목표인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해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재개발 추진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17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불안 완화를 위해 중소형·임대주택 13만 가구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있다.

중소형 분양·임대주택 9만7천 가구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겨 1월에는 9천4백30가구(계획 대비 1백18퍼센트)를 입주시켰고, 2~3월에도 1만79가구(계획 대비 1백13퍼센트)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판교 순환용 주택 1천3백 가구는 국민임대 주택으로 돌려 3월부터 입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 전국 2만6천 가구(수도권 1만3천 가구) 중 1만9천 가구의 입주는 3월부터 시작된다.

공공 부문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천5백 가구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 중이다. 추가로 미분양이 발생하면 즉시 전·월세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중소형 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10일부터 저리(2퍼센트)로 중소형 주택 건설자금을 특별 지원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 전·월세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을 1백50가구에서 3백 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시도지사에게 재개발, 재건축 추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지난 1월 20일 폐지해 저소득 세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들이 임대차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실거래 정보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1분기 입주 예정 정보는 지난 1월 21일 공개했으며 전·월세 실거래 정보도 오는 2월 26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한다. 허위 매물 정보 제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단속을 벌였다. 앞으로는 매달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도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간에서 건설하는 5년 임대주택에 대해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민간 주택건설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두 차례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 글·김성동 기자

여주 간매천에는 '세금 블랙홀'이 없었다

상습 수해하천에 제방 높여 지난해 2백50년 만의 폭우 피해 막아내

우리나라 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지자체가 관리를 맡는 지방하천으로 나뉜다. 뉴스에 오르내릴 만큼 큰 홍수 피해는 규모가 큰 국가하천에서 가끔 발생하지만, 논밭이 잠기는 등 작은 규모의 홍수 피해는 지방하천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난다. 정부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통해 반복적으로 홍수 피해를 입어 온 지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있다.

"우리 동네(이호리) 윗동네인 걸은리는 한강에 가까운 저지대입니다. 비만 오면 자주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이죠. 그런데 두 동네를 지나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간매천 제방이 새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 지난 가을 홍수 때에는 다른 때와 비교해 피해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경기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의 박병진(60) 이장. 그는 얼마 전 한 신문이 "30년간 물 한 번 넘치지 않은 간매천이 공사 후 수해하천이 됐다"고 보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건 틀린 얘기"라고 말했다.

최근 한 일간지는, "30년간 무재해 하천이던 간매천에 세금 1백여 억원을 들인 공사 직후 수해가 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간매천뿐 아니라 여주군에 있는 갈은천, 용담천도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정비했으며, 갈은천의 경우 제방이 너무 높아 기형적인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간매천은 제방 높이가 낮고 하천 폭이 좁아서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상습침수 지방하천이다. 2006년 경기도 요청으로 제방을 높이기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착공, 2010년 완공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정비사업을 요청한 것도 2006년 간매천 유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30년간 무재해 하천"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달라

'공사 후에도 수해하천이 됐다'는 일부 지적은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던 2010년 9월 여주 일원에 하루 강우량 1백87밀리미터의 '2백40년 빈도(2백40년 만에 한 번 오는)'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의 일이다. 간매천 설계(50년 빈도의 홍수 기준)를 초과하는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것이다.

이 일간지는 환경단체 관계자의 말을 빌려 "집중호우로 제방 곳곳이 무너져 내렸다"며 "수해 한 번 없던 지역을 1백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수해상습지로 만든 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선DB

지방하천인 고양시 대장천의 지난해 8월 모습. 아직 정비가 안 돼 환삼덩굴과 돼지풀 등 외래식물만 무성하다.

하지만 강천면사무소 직원 박거수씨(산업 담당)는 “그날 같은 비는 평생 처음 보았다”며 “한 시간 반 사이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완공을 앞둔 제방 하단이 일부 유실되고 호안블록이 약간 쓸려가긴 했지만 ‘무너져내렸다’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 만든 제방이 아니었으면 훨씬 더 많은 논밭이 침수되고 동네까지 휩쓸렸을 것이다. 2백50년 만의 폭우 피해를 막아내고 제방 하단과 호안블록 일부가 유실된 것을 가지고 예산낭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주군청 재난안전과 이석희 주무관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새로 쌓는 제방들이 과거 제방들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이는 유량과 계획홍수위에 따라 결정된 것이지 결코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간매천 제방을 높이고(42.94→45.97미터) 하천폭을 넓힘으로써 그날 홍수위(43.86미터)에도 범람을 막아 침수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999년부터 지방하천의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61개,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3천7백72개로 지방하천이 훨씬 많다.

마치 국가하천이 동맥과 정맥이라면 실핏줄처럼 국토의 곳곳에 뻗어 있는 지방하천은 큰 홍수 피해는 내지 않아도 수시로 크고 작은 홍수 피해를 입는다. 이에 따라 지방하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2010년 2백65군데 하천에 3천6백7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11년에도 2백84군데 하천을 대상으로 3천4백3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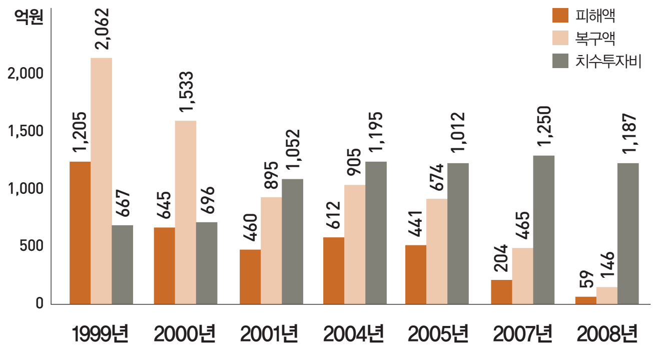
예산낭비 신고센터 통해 지금도 항상 감시 중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 노인균 사무관은 “지금까지 10여 년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수행된 이후 태풍 루사(2002년)와 매미(2003년), 에위니아(2006년) 등으로 인한 1백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제외하고 평균 범위 안에 드는 홍수를 놓고 보았을 때 홍수 피해액과 복구비가 크게 감소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방을 높이고 하천 폭을 넓혀 지방하천을 정비한 개보수율은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60.2퍼센트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전에는 20~30퍼센트 미만이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1천2백70밀리미터의 강우량이 주로 여름철에 60~70퍼센트 몰리는 집중호우가 내리며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집중호우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지방하천의 개보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재정 형편이 지방하천 개보수에까지 투자할 만큼 넉넉지 않아 국고보조 사업을 통해 지방하천의 개보수율을 높여 가고 있는 것이다.

10년간 연도별 홍수피해액 및 복구액(국가+지자체), 치수투자비(국가) 현황



· 재해연보(2008년 소방방재청) 자료
· 태풍 루사(2002년), 매미(2003년), 에위니아(2006년) 등 100년 빈도 이상의 큰 홍수 발생은 제외

노 사무관은 “제방을 높이고 하천을 넓혀 50년, 80년, 백년에도 안전한 치수사업은 인구밀집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꼭 필요한 일”이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는 본래 목적에 다소 미흡한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상습 홍수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국가 사업 자체에 대해 예산 낭비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예산 절감이야말로 정부가 상시 추진하는 목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 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선정 시뿐 아니라 사업진행 과정에서 지자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2005년 개설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 세금낭비 사례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전국의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도로굴착 등 연말마다 반복되는 ‘몰아쓰기식’ 집행 관행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당부하는 등 지자체의 예산낭비 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지자체에 설치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전담반도 운영토록 했다. 지난해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었던 지자체의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재원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정부 재정정책과 강병일 사무관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경비 절감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일부 자치단체의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이 지자체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어 사소한 예산집행에도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예산 낭비를 경계하고 감시를 강화해 국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예산을 알뜰히 쓰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G

글·박경아 기자



'글로벌 코리아 2010' 회의 모습. 3회째를 맞는 올해에는 '동아시아'를 주제로 세계 속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번째 맞는 글로벌 코리아 국제학술회의

떠오르는 동아시아 경제권 한·중·일 역할 '글로벌 점검'

이명박 정부 출범을 기념해 매년 열리고 있는 '글로벌코리아 국제학술회의'가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다. 지난 두 번의 회의에서는 국제 금융위기, 기후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전략 등이 논의되었으나, 올해는 '동아시아'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핵심 파워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중·일의 역할을 논의하고, 동북아 안보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룰 예정이다.

오는 2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동아시아―전망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코리아 2011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출범을 기념으로 시작된 글로벌 코리아 학술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후문제 등 세계적인 당면 과제와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채욱)이 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다.

2009년에는 '재편되는 국제질서, 한국의 선택', 이듬해인 2010년에는 '재편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파트너십'이란 주제로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올해는 '동아시아'를 주제로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 등 국내외의 저명한 석학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세계 속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중·일 3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18.6퍼센트, 외환 보유액은 47퍼센트에 이른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는 "2020년에 이르면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권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 규모 2020년에 미국 제치고 세계 최대"

미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도 이미 2007년 경제 분석에서 "30년 안에 한·중·일의 경제 규모가 세계의 23.1퍼센트에 이르게 됨으로써 유럽연합(EU·20.2퍼센트)과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보다 비중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유수의 경제 연구기관들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군사문제 등도 G7회의가 아닌 동아시아의 신흥국들이 다수 포함된 G20회의가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올해 글로벌 코리아 학술회의에서 동아시아를 주제로 내세운 것은 이처럼 동아시아로 전환되는 세계 경제의 흐름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안내문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는 경제, 정치, 외교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다"며 "세계 질서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에 대해 세계 석학들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이 주축이 된 동아시아 경제권의 힘은 화폐통합이나 동아시아 내의 FTA 등 통합 경제권을 향한 실질적인 논의로 가시화되고 있다.

2010년 중국이 홍콩, 마카오 등 아세안 회원국에 이어 대만과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함으로써 중화경제권이 본격 가동된 가운데 한중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동아시아 각국은 통화협력, 동아시아 FTA 등 장기적인 경제통합 논의도 진척시키고 있다.

"남북문제 등 동북아 안보도 주요 이슈"

하지만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가로막는 장벽도 존재한다. 북한이 일으키고 있는 한반도 평화 위협, 경제의 주도권을 두고 벌이는 중·일의 경쟁 구도와 아시아 각국의 군비경쟁 등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가 산적해 있다.

'글로벌 코리아 2011'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장벽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무엇보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각국의 역할을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글로벌 코리아 국제회의에서는 크게 동아시아의 경제문제, 안보문제, 한국의 역할이라는 3개의 주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동아시아의 부상과 향후 전망(기조 세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비전과 전망 ▲동아시아 정치·외교 질서 ▲세계 속의 동아시아와 한국의 역할 등 4개의 분야별 세션(기조 세션 포함)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형권 선임연구원은 "동아시아 중심국인 한·중·일 3국은 여러 방면에서 라이벌 관계이면서도 협력을 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에 있다"며 "최근 북한의 도발과 핵문제 등 동북아의 안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와 북한문제가 주요 이슈로 채택된 것이 이번 회의의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G

글·이상훈 기자

Global Korea 2011 행사 일정

2월 23일 (수)			
세션	시간	구분	내용
환영만찬	18:40 ~ 20:40	환영만찬	국무총리 주최 환영만찬 장소 : 롯데호텔 3층, 사피이어볼룸

2월 24일 (목)			
세션	시간	구분	내용
등록	07:00 ~ 16:00	등록	
개회식	09:00 ~ 09:03	개회사	곽승준 /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
	09:03 ~ 09:05	환영사	김세원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기조연설	09:05 ~ 09:20	기조연설	
기조강연	09:20 ~ 09:35	기조강연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 전 말레이시아 총리
기조세션 / 동아시아의 부상과 향후 전망			
기조세션	사회자		데이비드 생어 / 뉴욕타임즈 워싱턴 지국장
	09:35 ~ 09:45	토론자	정운찬 / 전 국무총리
	09:45 ~ 09:55		하루히코 구로다 /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09:55 ~ 10:05		티에리 드 몽브리알 /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10:05 ~ 10:15		왕지스 / 중국 북경대학교 학장
	10:15 ~ 10:35	종합토론	
휴식	10:35 ~ 10:50	휴식	
세션 1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비전과 전망			
세션 1	사회자		채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10:50 ~ 11:10	발표자	하루히코 구로다 /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11:10 ~ 11:30		수팟차이 파닉치팍디 /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
	11:30 ~ 11:40	토론자	케이 케사바페니 / 동남아시아 연구소장
	11:40 ~ 11:50		임종룡 / 기획재정부 제1차관
	11:50 ~ 12:00		위용딩 / 중국사회과학원 전 소장
	12:00 ~ 12:20	종합토론	
오찬	12:20 ~ 12:30	오찬환영사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12:30 ~ 14:00	오찬	
세션 2 / 동아시아 정치 · 외교 질서			
세션 2	사회자		수팟차이 파닛치팍디 /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
	14:00 ~ 14:20	발표자	신각수 / 외교통상부 제1차관
	14:20 ~ 14:40		왕지스 / 중국 북경대학교 학장
	14:40 ~ 14:50	토론자	데이비드 생어 / 뉴욕타임즈 워싱턴 지국장
	14:50 ~ 15:00		서재진 / 통일연구원 원장
	15:00 ~ 15:10		다나카 히토시 / 전 일본 외무 심의관
	15:10 ~ 15:30	종합토론	
휴식	15:30 ~ 15:45	휴식	
세션 3 / 세계 속의 동아시아와 한국의 역할			
세션 3	사회자		한승주 / 외교통상부 전 장관
	15:45 ~ 16:05	발표자	티에리 드 몽브리알 /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16:05 ~ 16:25		위용딩 / 중국사회과학원 전 소장
	16:25 ~ 16:35	토론자	허경욱 / OECD 대사
	16:35 ~ 16:45		타카토시 이토 /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
	16:45 ~ 16:55		이숙종 /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16:55 ~ 17:05		바실리 미헤예프 /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 부소장
	17:05 ~ 17:25	종합토론	
폐회	17:25	폐회	
환송만찬	18:30 ~ 20:30	환송만찬	장소 :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주최기관 미정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구로다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글로벌 석학·저명인사 20여명 '서울 토론'

'글로벌 코리아 2011, 세계 속의 동아시아-전망과 도전'에는 전 세계적인 석학과 저명인사 20여명이 참석해 '세계 속의 동아시아-전망과 도전'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글로벌 코리아 2011의 본격적인 시작은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의 기조강연이다. 이어 기조 세션 및 3개의 분야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조 세션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부상과 향후 전망'으로 데이비드 생어 뉴욕타임스 워싱턴 지국장의 사회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 하루히코 구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티에리 드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소장, 왕지스 중국 베이징대학교 학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비전과 전망' 세션은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맡는다. 하루히코 구로다 ADB 총재와 수팟차이 파닛치팍디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이 발표하고 케이 케사바페니 동남아시아 연구소 소장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위융딩 중국사회과학원 전 소장이 토론을 벌인다.

'동아시아 정치·외교 질서' 세션은 수팟차이 파닛치팍디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이 진행한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왕지스 중국 베이징대학교 학장이 발표를, 데이비드 생어 뉴욕타임스 워싱턴 지국장과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 심의관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

마지막 세션은 '세계 속의 동아시아와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다. 한승주 외교통상부 전 장관이 사회를 맡는다. 발표는 티에리 드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위용딩 중국사회과학원 전 소장이 하고 토론은 허경욱 OECD 대사와 다카토시 이토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비실리 미헤예프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이 맡는다.

발표와 토론을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 중심지로 부상하는 동아시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모색, 발전 방향을 짚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대회는 세계적 석학과 저명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발표와 토론자로 나서는 연사들의 약력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조선DB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2월 24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코리아 2010' 개회식에 참석, 기조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말레이시아의 정치가로서 1975년 '통일 말레이인 국민조직(UMNO)'의 3부총재 중 1명으로 선출돼, 1981년 당 총재가 됐다. 같은 해 7월 말레이시아의 4대 총리로 취임한 이후 2003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아 1946년 '통일말레이인 국민조직(UMNO)'이 결성되면서부터 당원으로 일했다. 1964년 총선에서 당선, 국회의원이 됐다. 1979년의 술탄 이브라힘 메달상, 1989년의 케다 공훈상 등 국내에서의 수상 이외에도 한국을 비롯해 일본·미국·이집트·쿠바·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많은 훈장을 받았다.



위용딩
전 중국사회과학원 소장

중국 사회과학원(CASS) 소장, 월드 이코노미(World Economy) 중국협회 회장, 중국 개발 및 재건 국가 프로그램 자문위원, 중국외교통상부장관 자문위원, UN 개발정책 자문위원 회원을 역임하고 있다. 1979년 월드 이코노믹스(World Economics) 협회에 가입했으며 1987년 상임연구소장, 1995년 상급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거시경제학, 세계경제 등과 관련된 저서를 집필했고 여러 저널에 많은 논문을 기고했다. 중국 선예팡(Sun Yefang) 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다.



수팟차이 파닛치팍디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D) 사무총장이다. 1986년 태국 재정부 차관으로 재직했다. 1988년에는 타이군인은행(Thai Military Bank)의 은행장으로 활동했다. 1992년 재무담당 부총리로 재직하며 태국 무역정책 및 경제 방향을 잡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경제 부흥을 위해 국제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역 간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APEC, ASEAN, ASEM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오기도 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WTO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왕지스
베이징대학교 국제전략센터 학장

2001년부터 현재까지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제전략센터의 학장을 역임하고 있다. 중국 외교통상부 외교정책 자문위원회의 회원, 미국학 중국협회 회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 UC 버클리, 미시간 대학교–앤아버, 캘리포니아 소재 클레어몬트 맥케나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했다. 베이징대학교 외교정치학 교수로도 재직했다.
현재 미국 외교정책 연구원의 중국 외교정책 자문위원, 더 아메리칸 인터레스트(The American Interest)·글로벌 아시아(Global Asia) 등 외교와 관련된 다양한 저널의 편집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카토시 이토
도쿄대학교 교수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이다. 일본 학자로서는 드물게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연구원과 일본 재무성 차관보를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현재 도쿄대 경제학대학원과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직을 맡고 있다.
1979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히토쓰바시 대학 정교수와 하버드 대학 초청교수를 거쳤다. 2004년에는 일본경제학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일본 경제〉(1992), 〈일본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정치 경제와 일본 중앙은행〉(2000), 〈독립성과 책임성 있는 국제통화기금(IMF)〉(1999) 등이 있다.



하루히코 구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현재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개발은행 이사회 회장이기도 하다. 2004년에 만장일치로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로 선출됐으며 2006년에도 재선에 성공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의 특별 자문이었고 도쿄에 있는 히토쓰바시 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금융국 국장과 재무성 차관을 지냈다. 차관 재임 중 '치앙마이 선언'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G

글·박근희 기자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 아름 선사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사제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배움에는 끝이 없기에 불혹(40세), 지천명(50세), 이순(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부학교 학생들은 선배들의 책 읽는 소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요즘 졸업식에는 밀가루, 계란, 교복 찢기 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들립니다.

글·서일호 기자



연합

1 2007년 이후 3년 만에 졸업생 3명을 배출한 군산 해성초등학교 내초분교. 2월 11일 열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동생들의 '바위섬' 연주를 듣고 있다.

2 2월 9일 서울 수도여고 졸업식에 참가한 졸업생들이 선배 디자이너 이옥선이 디자인한 망토를 두르고 졸업식에 참가했다.

3 2월 8일 대전 한밭고등학교 앞에서 졸업생들의 일탈행동을 막기 위한 순찰활동을 펼치던 한 경찰관이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4 2월 10일 서울 송파구 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신명주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태경 기자



신현종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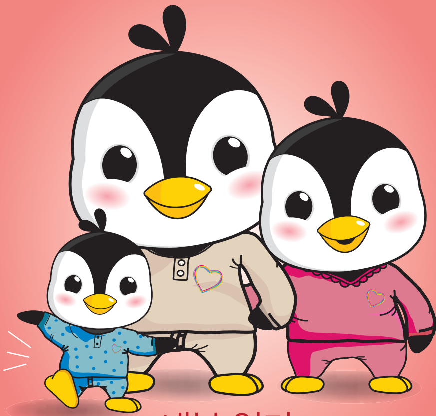
한준호 기자



저탄소 생활실천 그린에너지패밀리



무릎담요 사용하기


내복 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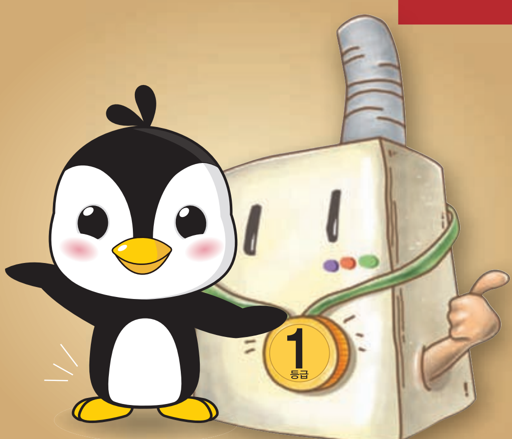

카디건(조끼) 입기

온(溫)맵시로 따뜻하게
실내온도 18℃

올 겨울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8가지 에너지절약 비법을 공개합니다


커튼 달기


틈새바람 막기



효율높은 난방기 쓰기


카펫트 깔기


덧신 신기

내복입기로 체온은 올리고 **난방비**는 줄이세요

1℃의 비밀, 난방비 절약

실내온도 1℃를 낮추면 난방비 7%가 절약됩니다.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 낮추면 난방비를
약 20%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온도의 비밀, 18℃

"겨울철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크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실내온도를 20℃~18℃로 설정해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들도록 유지합니다."

– 유병연 교수(건양대학교 가정의학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그린에너지패밀리(www.gogef.kr)
생활전반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생활실천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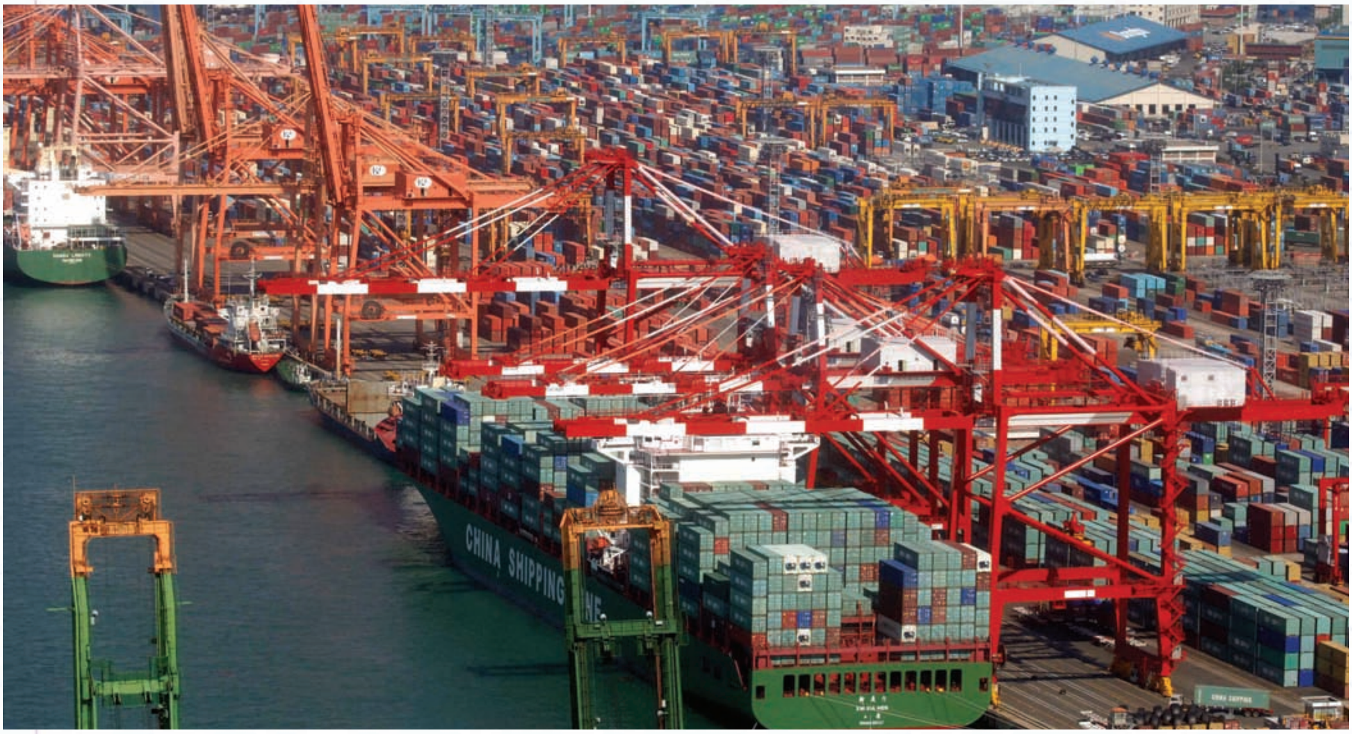
기 획 특 집

이명박정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3년은 위기와 극복,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듬고 정부 곳간을 열었습니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7대 무역대국에 올라섰습니다.
경제성장률은 회복했고 일자리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장에 바빠 지나쳐온 그늘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 더 큰 대한민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 이번 호는 이명박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경제 성장, 친서민 복지, 규제 개혁 등 나라 안에서 둘러보았습니다. 다음 호는 G20 정상회의 개최, FTA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분야 성과를 조명하게 됩니다.


일러스트 · 이우정



조선DB

한국은 수출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무역위기를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다. 지난해 한국은 6.1퍼센트의 GDP성장률을 기록, OECD 2위를 차지했다.

금융위기 딛고 세계경제 새 구원투수로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은 한국이 10여 년 만에 또다시 경제위기에 봉착한 해였다.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휘말린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강했다. 보란 듯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구원투수로 떠올랐다. G20정상회의를 유치하며 국제사회에서 위상도 높였다. 서민을 향한 따뜻한 손길도 잊지 않았다.

2009년 초, 한국의 경제 상황은 '패닉'에 다름 아니었다. 2008년 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탓이었다. 먼저 무역수지부터 충격적이었다. 2008년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외환위기 후 11년 만에 터진 적자였다.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2000을 넘으며 승승장구하던 것이 절반으로 꺾였다. 반대로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몰랐다. 1천원이 안되던 원·달러 환율이 1년 만에 1천6백원을 위협하고 있었다.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0여 년 전 외환위기의 악몽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했다. 전대미문의 외환위기를 놀라운 속도로 극복한 한국의 저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의 수렁에서 빠져나왔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환율이라는 악조건을 수출 증대라는 기회로 만들며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주가도 강한 '브이(V)자' 회복세를 과시했다. '역전의 명수, 한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대응 능력은 세계의 관심 대상이 됐다. 위기를 극복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위기에 맞서나갔다. 위기 초기에 재정투입을 집중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했고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으며 환율을 안정시켰다.

위기 극복 후 공정사회·친서민 행보 박차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상대 교수는 "OECD회원국 가운데 2009년 플러스 GDP 성장을 기록한 국가는 3개국에 불과한데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며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는 점만으로 현 정부에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고 말했다.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정부는 성장과 내실을 동시에 다지기 시

작했다. 경제와 사회의 격을 높이는 작업이었다. 위기 속에서 충분히 보듬지 못했던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본격화됐다. '서민정책 지원 점검단'를 구성해 15개 분야의 55개 현장밀착형 친서민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을 위한 따뜻한 금융도 확대했다. 보금자리 주택을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도모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기반도 확충해 나갔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일구기 위해서다. 유아 학비 지원을 늘리는 등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했다. 공정하게 출발하자는 취지다.

G20 정상회의 성공으로 국제사회 새 리더로

중증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넓히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도 도입했다. 최저생계비를 인상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소득 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강력하게 추진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한쪽에만 몰려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구두발주를 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벌어지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갔다.

미래성장을 위한 대비에서도 적잖은 성과를 냈다. 먼저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10대 녹색기술별 산업화 전략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그린카 등 신성장동력별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LED 조명시장도 확대했다.

석유 및 가스 자주개발률이 사상 최초로 10퍼센트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와 자원확보 부문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올해 본류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창의적 인재 양성에도 공을 들였다. 2007년 40명이던 입학사정관을 2010년 5백12명으로 늘리는 등 입학사정관제의 내실을 강화해 초·중·고의 창의 인성교육 풍토를 확산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전면 도입해 교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마이스터고,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고 등 교육여건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고교운영을 들여와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반도 강화했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 바우처를 확대했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는 2009년 29만6천명에서 2010년 35만명으로, 체육은 9천4백명에서 1만3천9백명으로 늘었다. 2010년 신설된 여행 부문 수혜자는 6천명이다.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공감형 문화체육시설도 늘렸다.



경제회복과 함께 주가지수도 강한 반등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 27일 코스피지수는 장중 사상최고치인 2121.06까지 치솟았다.

노사관계도 선진화됐다. 13년 동안 차일피일 미뤄지던 전임자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순조롭게 현장에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장에서 노사관계도 크게 안정화됐다. 노사분규 건수가 2009년 11월 1백16건에서 2010년 11월 76건으로 34.5퍼센트 감소했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근로손실일수는 59만1천1백87일에서 46만8천7백23일로 20.7퍼센트 감소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큰 결실을 맺었다. 먼저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비서구권 최초로 의장국이 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의제 등 글로벌 의제를 주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계 유일 원조수혜국서 원조공여국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 확대됐다. 2009년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2000년 2억1천만 달러에서 2010년 8억2천만 달러로 크게 불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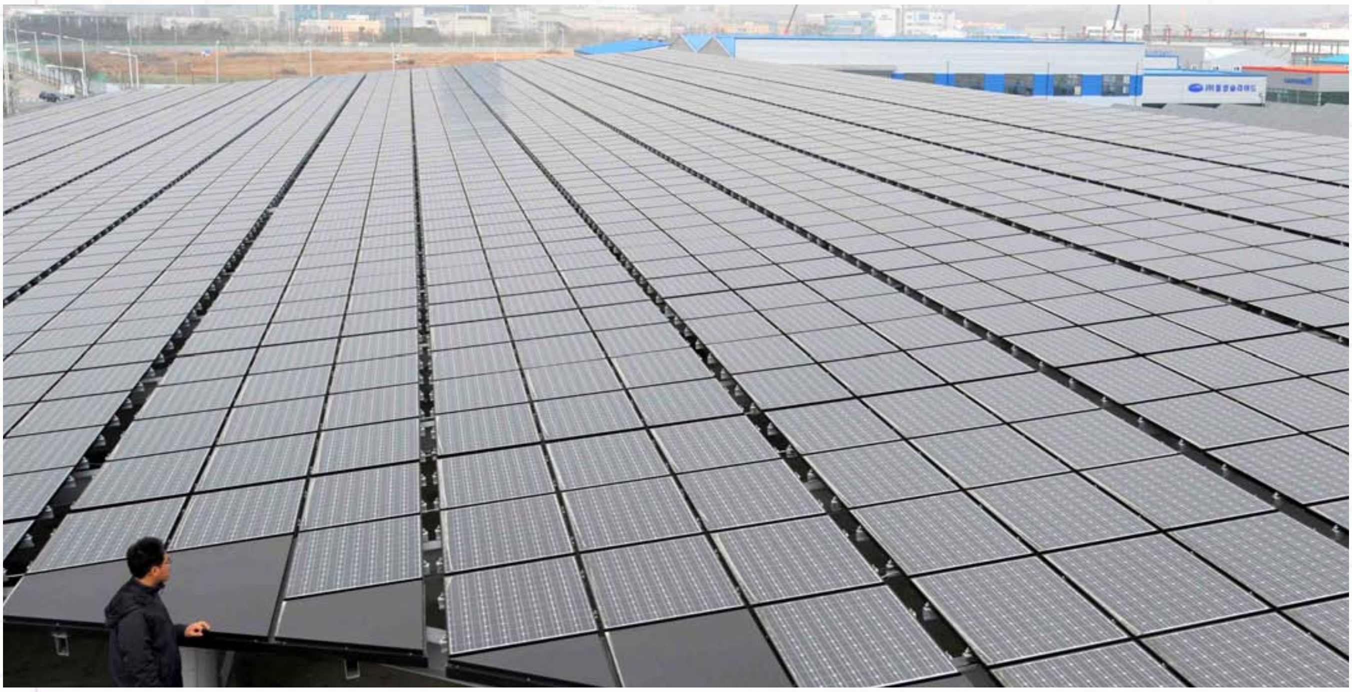
FTA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지난해 한국은 EU,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해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3대 경제권을 잇는 FTA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큼 다가섰다.

실용외교의 보폭도 넓혔다. 한미 전략동맹과 정책공조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해 신아시아 외교를 강화했고 중남미 지역 국가와 정상회담을 가져 자원·에너지 경제협력 외교를 펼쳤다. G

글·변형주 기자

성장률 OECD국가 중 2위로 위상 높여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에 힘입어 OECD 국가 중 가장 강력한 회복을 이룬 나라 중 하나다."(OECD) 세계가 놀랐다. 위기를 극복하는 한국의 저력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게다가 한국은 한 걸음 더 나갔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성공했다.


조선DB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후 녹색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수출은 2년 사이에 6배나 증가했다.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2008년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한 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적 역할 모델이 사라진 듯한 국제사회에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6일 미국의 유력지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한국의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미국도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2008년 말 전세계를 휩쓴 글로벌 금융위기를 신속히 극복한 데다 다른 나라가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오히려 강한 성장세를 구현하며 '최후의 승자'로 부상한 한국경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경제성장률 6.1퍼센트를 달성, OECD 2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인 2009년 세계 3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놀라운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 비해 한국은 위기 이전에 비해서도 적잖은 성장을 일궈냈기 때문이다. 2008년 3분기를 100으로 놓고 볼 때 한국의 2010년 3분기 GDP는 105.7로 미국(100.4), 유로(98.9), 일본(97.8)을 큰 폭으로 앞서고 있다.

더욱 긍정적인 것은 경제성장에서 민간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다. 정부의 기여도는 감소하는 반면 민간의 기여도는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의 자생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 급증 타고 GDP성장 '쑥쑥'

2009년 1분기 1.9퍼센트 포인트였던 정부의 GDP기여도는 지난해 1분기 0.8퍼센트 포인트, 3분기 0.2퍼센트 포인트로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민간 기여도는 마이너스 6.2퍼센트 포인트, 7.3퍼센트 포인트, 4.2퍼센트 포인트를 기록하며 GDP성장을 이끌었다.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은 해외수출 증가였다. 세계 경기의 회복과 국내 기업의 강해진 제품경쟁력이 맞물리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전년 대비 30퍼센트 가까이 늘어난 4천6백50억

달러어치를 수출하며 사상 최초로 세계 7위에 올랐다. 2009년 9위에서 2계단 상승한 성적이다.

무역흑자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09년 4백4억 달러로 기록을 갈아치우더니 지난해엔 4백10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며 다시 한 번 신기록을 작성했다. 수출대상국도 다변화되고 있어 수출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수출 비중은 2007년 65.9퍼센트에서 지난해 10월 71.9퍼센트로 불어났다.

수출품목 중에서도 부품 소재 산업의 활약이 돋보였다. 2010년 부품 소재 수출은 2천2백60억 달러로 세계 6위였다. 이를 통한 무역흑자는 7백70억 달러에 달했다. 전체 무역흑자의 2배가량을 부품 소재 산업에서 달성한 것이다.

부품 소재 산업의 약진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품 소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핵심부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10대 핵심소재에 대해 201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고 2천억원을 들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20개 소재산업의 조기 자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투입 효과 '톡톡'

녹색성장 부문에서도 발전이 있었다.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 국가 비전을 선포한 후 관련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는 등 녹색성장의 인프라를 다져 나갔다. 그 결과 2년 만에 녹색산업지수는 1백28.5퍼센트나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대표적인 예로 신재생에너지의 수출이 급증했다. 2007년 7억7천만 달러였던 것이 2009년 46억 달러로 2년 만에 6배나 증가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이 부문 수출을 4백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녹색 일자리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61만 개에서 2013년 81만 개로 5년 만에 2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

재정 부문의 대응도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009년 28조4천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그중 64.8퍼센트를 조기집행하는 등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했다.

대규모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화유출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했다. 특히 미국과 3백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대외적인 신뢰를 쌓으며 환율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

정부는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2010년에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무엇보다 외환의 유출·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2차에 걸친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을 시행했다.

1차 방안은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해 단기외채가 급증하는 것을 차단했다. 외화대출 규정도 강화했다. 해외 용도로만 대출하게 해 불필요한 외환 수요를 막았다. 2차 방안은 그동안 비과세였던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외 자금이 과도하게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였다. 향후에는 은행의 지나친 외화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단순히 공적 부문의 임시직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산업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창출 능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10억원당 약 18명의 고용을 창출해 10명이 채 안되는 제조업을 크게 앞선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콘텐츠·미디어, 사회서비스, 관광·레저, 교육, 연구개발서비스 등 고용잠재력이 높은 5개의 유망 서비스업을 선정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서비스업 수출 여신을 2010년 2천억원에서 2013년 3천5백억원으로 늘리는 등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MICE산업(회의 및 전시산업)의 발전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56만명이던 참관객을 2015년까지 1백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MICE육성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MICE육성협의회의 회원사는 전년도에 비해 10개 늘어난 61개사다.

MICE산업 육성은 이미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제19차 유엔WTO 총회, 독일 여행업협회 총회, FDI 세계치과의사협회총회 등 27건의 국제회의를 유치했고 1만5천명 규모의 중국 바오젠그룹의 인센티브 관광 등 3만2천명 규모의 인센티브 관광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G

글·변형주 기자


조선DB

소재 부품산업은 7백7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수출한국'의 첨병으로 부상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국가체질 개선

지속발전을 위한 기반확충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고, 그 외 4대강사업과 원자력 발전 수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도 지속발전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조선DB

2010년 1월 25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4호기 건설현장에서 기술자들이 작업장으로 향하고 있다. UAE에 수출되는 한국 신형원전(APR1400)이 처음 건설되는 곳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의 개념에 대해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

이후 정부는 지속발전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지속발전 기반확충 사업은 비단 녹색성장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의 지속발전 기반확충 사업을 크게 7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세계로 뻗어 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과 동법 시행령(2010년 4월)을 마련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녹색성장 정책을 펴고 있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정책과 관련 법이 속속 제정되고 있다.

녹색산업 분야에서 민간의 투자와 우수한 녹색기술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녹색인증제도를 도입(2010년 4월)하였고, 10대 핵심 기초 녹색기술을 선정해 이 분야에 연구개발(R&D) 예산이 차질 없이 배분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했다(2010년 7월). 녹색인증제는 녹색산업 분야의 범위와 기술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 융자와 세제혜택 등을 주는 제도다.

우리 녹색성장 정책의 전세계 전파에도 많은 성과를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2010년 6월에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여 개도국의 녹색성장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G20 정상회의에서 녹색성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녹색성장전략 개발에도 참여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가시화되고 있는 신성장동력 성과

2010년 1월 민간의 신성장동력 산업 투자를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투자펀드 9천억원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에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정보와 기술동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세제와 고용창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경기회복과 함께 주요 기업의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2009년에 비해 11.4퍼센트 증가했다.

신성장동력 중 단기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핵심 산업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스마트프로젝트' 시행으로 발광다이오드(LED) 장비 등의 수출을 통해 1조9천8백억원의 신규투자와 5천7백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또한 LED, 시스템반도체, 태양전지, 바이오의약품 등 8개 선성장동력 분야의 육성방안에 대한 세부 전략도 마련됐다.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과학기술에 대한 중복투자를 피하고, 부처 간의 과학기술 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심의하고, R&D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등 일원화된 국가 R&D 관리체계를 완성했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2010년 10월)하고 과학기술 기본법을 제정(2010년 12월)하는 등으로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했다. 또한 과학기술 관련 연구비의 집행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의 전자세금 시스템과 연계하여 과학기술 관련 연구비의 투명성을 높였다.

4대강살리기의 차질 없는 진행

현재 4대강살리기 사업은 보(洑) 건설과 준설 공정에서 금년 말 목표인 60퍼센트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보와 준설은 내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을 포함하여 92개 하천 사업이 모두 착공됐고, 4대강사업 반대 단체가 제기했던 각종 소송이 모두 기각됨으로써 사업의 법적인 정당성도 확보됐다.

내년도 사업 완공을 위한 예산(3조1천억원) 확보와 친수구역 활용에 대한 특별법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투기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구역 개발이 가능해졌다. 4대강 수질과 생태개선 사업을 위한 관련 시설과 수질오염 감시 시스템, 멸종위기 어류 복원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發電)을 수출 효자 종목으로

2010년 10월 원전(原電) 수출 산업화와 국내 원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양성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원전 인턴십 실시, 원전 특성화 대학 지정, 우수인력 조기 발굴 및 능력 향상, 중장기 인력양성 체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됐다. 원전 인력양성 계획이 마련됨으로써 우리는 국내 원전 확대, UAE(아랍에미리 트) 원전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추가 원전 수주를 대비한 인력양성 등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

그동안 기술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자력 관련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원전제어 계측장치 개발에 성공했으며(2010년 7월), 2012년까지 신형 국산화 원자로(APR+)에 대한 기술 개발을 끝내겠다는 계획도 이상 없이 추진 중이다.

건설 중인 신(新) 울진 1, 2호기에 국산 원전제어계측장치를 적용하면 4천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향후 원전 도입을 계획 중인 나라를 대상으로 민관이 힘을 합쳐 맞춤형 수주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석유·가스, 희귀 금속 확보에 총력전

석유·가스 수입물량 중 우리 기업이 직접 개발해서 들여오는 자주개발률이 2010년 목표치인 10퍼센트를 넘어섰다. 아울러 유연탄, 아연, 니켈 등의 6대 전략 광물(鑛物)의 자주 개발률도 목표치(27퍼센트)를 달성했다.

IT와 녹색산업, 첨단산업 등에 없어서는 안 되는 희토류 등 희귀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2010년 10월)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희귀 금속과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과 협력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2010년 8월에는 한국–볼리비아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볼리비아의 리튬 광산 개발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라크, 아프리카 등에 대규모 민관 경제사절을 파견하여 해당국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계기도 마련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강화로 미래에 대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4대 분야에 231개 과제를 마련해 75조8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자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제도를 정액 지급제에서 임금의 40퍼센트를 지급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바꾸었다. 또한 일자리나누기, 임금피크제를 통한 중·고령자의 고용연장, 고령 실직자 대해서 직무훈련과 현장연수–취업알선을 연결하는 패키지 취업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G

글·이상흔 기자

밀착형 '서민 복지'로 꿈과 희망 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글로벌 경제위기로 시작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렇게 시작됐다. 경제위기 극복 노력과 더불어 복지 안정망을 갖추는 일에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지난 3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따뜻한 국정 운영, 희망을 되찾고 미소를 지켜 주는 친서민정책이 일관되게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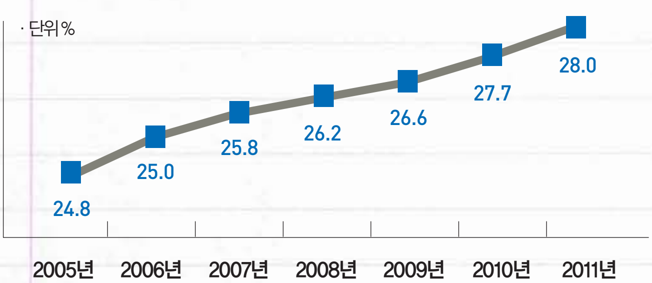
서울 성북구 월곡동 한 골목. 어려운 이웃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동네 한 곳에 부부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태양반점'이 있다. 이곳 주인인 최길홍(39)씨. 그는 자장면 한 그릇에 행복을 듬뿍 담아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아름다운 이웃'이다. 그는 서울시의 소외계층 후원프로그램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참여자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일찍이 중국음식점에 취직해 일을 배웠던 그는 결혼 무렵 전셋돈을 빼 중국음식점을 열고 가게 안에 신혼 살림을 차렸다. 아내는 배달을 맡고 그는 요리를 맡아 열심히 살았다. 지금은 83평방미터가량 면적의 태양반점을 운영할 만큼 살림이 폈다. 하지만 '남을 돕는 일'은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만 생각해 왔다.

그러던 그가 2009년 겨울 인근의 한 복지관에 배달을 갔다가 그곳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았다. 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 아이들이었다.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만나 '아름다운 이웃'이 됐다.

2008년 8월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친서민정책·일자리창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지자체의 친서민정책이다. 지역 내 학원, 병원, 상점 등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해 온라인바우처로 소외계층 이웃과 함께 나누는 '착한 정책'이다. 지난해까지 4천7백72개 기부업체가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



매년 지방비 54억원을 들여 장애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경남도의 '중증장애인도우미 뱅크', 복지연대망을 구성하여 소년소녀 가장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과 결연시켜 주는 대전의 '복지만두레' 등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공모전을 열면서 친서민정책 발굴에 나선 것은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의 결실을 서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장밀착형 복지가 바로 친서민정책이 가고자 하는 곳이다. 지난 2008년 3월 3일 새 정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서민생활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이었을 정도로 정부는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민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정부·지자체 친서민 정책 앞다퉈 내놔

구호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다. 피부에 와닿는 친서민 복지의 확산과 내실화에 목표를 둔 정부는 2010년 8월 교육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정책지원점검단'을 구성해 '현장밀착형' 친서민정책의 발굴과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서민정책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는 2010년 9월 '서민희망본부'를 출범시켰다. 서민희망본부는 정부와 국민, 중앙과 지방 간 상시적인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준석 서민희망본부 현장소통팀장은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 강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동시에 서민희망본부를 통해 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감동적인' 정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지원 강화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처 방안의 하나로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2007년 41만4천명에서 ▲2008년 43만1천명 ▲2009년 64만명 ▲2010년 76만1천명 ▲2011년 92만2천명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4차례의 서민정책지원점검단 회의를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과 아동청소년, 서민금융, 주거, 일자리 창출 등 15개 분야, 55개 친서민정책 중점과제를 선정해 2010년 10월 국가정책조정회의



조선DB

'한국형 엘 시스테마'는 정부가 추진 중인 친서민제도의 하나. 사진은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 관계자 등이 지난 1월 19일 서울 세종 꿈나무 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지도하는 모습.

를 통해 확정했다. 이어 이들 중점과제 중 ▲미소금융 내실화 ▲든든학자금 보완 ▲보금자리 주택 보완 ▲대입전형료 개선 ▲'한국형 엘시스테마' 등 단기 시행이 가능한 9개 친서민제도개선 과제 추진 방안이 마련됐다(11월 30일).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해 2009년 12월 출범한 미소금융은 햇살론과 함께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이다. 미소금융은 2010년 말까지 총 1백5개의 미소금융지점이 설립돼 1만3천5백여 명에게 1천62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보육·자활지원 강화…보금자리 주택으로 내 집 마련 손길

서민들이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사업과 생활 자금을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햇살론은 2010년 7월 출시 이후 같은 해 연말까지 15만 건, 1조4천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취업 후 상환'이란 조건으로 재학 중 상환 부담을 없앤 든든학자금은 도입 첫해인 2010년 13만1천8백90명에게 8천4백69억원이 대출됐다. 학자금 대출 금리도 ▲2008년 2학기 7.8퍼센트 ▲2009년 1학기 7.3퍼센트 ▲2009년 2학기 5.8퍼센트 ▲2010년 1학기 5.7퍼센트 ▲2010년 2학기 5.2퍼센트 등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과 희망 실현에도 정부의 손길이 미쳤다. 정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보금자리 주택'을 도입, 지금까지 시범지구에서 4차지구까지 18만4천 호 공급 계획을 내놓았다. 보금자리 주택은 2018년까지 수도권에 1백50만 가구의 임대와 분양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누구나 꿈을 꾸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이 복지다. 때로는 그러한 손길을 음악이 대신하기도 한다.

매주 수요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연습실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음악프로그램 '엘 시스테마'를 본뜬 '세종 꿈나무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서툴지만 열정적인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지난 1월 19일 이곳에 원조 '엘 시스테마' 출신 플루티스트 니콜라스 레알과 엘 시스테마 USA를 창립한 마크 처칠 감독이 방문해 화제를 모았다. 2010년 7월 첫 연습을 시작한 이 악단 단원은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 출신이다.

지난 2월 8일에는 대구에서도 동구의 6개 초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60여 명으로 구성된 '희망음자리오케스트라'가 연주발표회를 가졌다. 이렇게 곳곳에서 꿈과 희망이 자라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 수요가 절실한 곳에 밑거름이 되어온 친서민정책의 결실이다. G

글·박경아 기자

대기업·中企 상생 통한 동반성장 박차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후 우리 사회 전반에 상생을 위한 공정사회 기반 조성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눈에 띄는 분야가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다.

#1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하는 업체인 인탑스(대표 김재경). 지난해 이 업체는 기존 8개의 컨베이어 라인을 12개의 셀라인으로 변경하고 레이저 패턴 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제조, 기술 혁신으로 약 75억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갤럭시S 배터리 커버에 도트(Dot) 패턴을 적용한 차별화된 디자인을 시도해 갤럭시S가 삼성 스마트폰 사상 최초로 1천만 대를 돌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동종 업계 최초로 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증착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한편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서 금속 소재 사용이 가능한 '이종재질 접합 기술'을 개발하는 등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꾀하고 있다.

1981년 매출 1억2천만원, 직원 45명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1983년부터 삼성전자 협력사로 30여 년간 일해 오면서 현재는 매출 4천3백억원, 국내외 직원 3천여 명의 글로벌 부품업체로 성장했다.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요인은 무얼까. 김재경 대표이사는 "그동안 삼성전자로부터 기술, 자금, 설비 자동화 지원, 경영컨설팅까지 받아왔다"면서 "인탑스의 역사는 삼성전자와 함께 말 그대로 동반성장을 해온 역사"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21일 경기 수원시 소재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 열린 '협력사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9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최경환 당시 지경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의 고속전기차 양산모델인 '블루온(BlueOn)'을 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청와대 안에서 블루온을 시승해 보기도 했다. 블루온은 양산 개념의 전기차로는 일본 미쓰비시의 '아이미브(i-MiEV)'에 이어 세계 2번째 차량이지만, 제원상의 성능 면에서는 경쟁차종을 압도하는 수치를 보인다.

완속 6시간의 1회 충전으로 약 1백40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으며, 최고속도는 시속 1백30킬로미터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백킬로미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3.1초로, 아이미브(16.3초)보다 가속능력이 좋다.

블루온은 현대자동차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모터, 인버터, 감속기, 배터리, 직류 변환장치, 충전기, 고전압 와이어링 등 11개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데 총 1백30여 개 협력업체가 참여했다. 참여업체 가운데 88퍼센트인 1백14개 업체가 중소기업인 2차, 3차 협력업체들이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연구개발을 위해 배정된 정부 지원금 94억원 가운데 90퍼센트에 달하는 85억원을 부품 협력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블루온의 탄생을 가져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공정한 사회'를 강조한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상생을 위한 공정사회 기반 조성 노력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강자와 약자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공정이 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눈에 도드라져 보이는 분야가 기업들의 상생 노력이다.

금년 초 삼성 이건희 회장은 신년하례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은 한국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천전략도 함께하는 상생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 공정거래질서 확립, 동반성장 전략 확산,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0월 26일에는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혁신전략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기업 현장에서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협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기업들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과거와 다른 점은 구호가 아닌 실제적인 실천전략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LG는 지난해 9월 협력회사를 '성장 파트너'로 적극 육성하기로



조선DB

기업은행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로드쇼'를 주제로 지난 2010년 9월 2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에서 개최한 현장 채용 박람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을 담당할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위원회가 2010년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파이낸셜뉴스 빌딩에서 열렸다. 상생과 동반성장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다.

하고 2천여 개 협력사와 'LG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가졌다. LG는 상생협력 5대 전략과제를 R&D(연구개발), 장비국산화, 사업 지원, 금융 지원, 협력회사 소통 전담 온라인 창구 개설 등으로 정했다. 총 7천4백억원의 금융 지원, 5년간 1천억원 규모의 우수 중소기업 R&D 지원책도 발표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 1월 14일 협력업체와 사회공헌 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책임경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현대·기아차가 협력업체들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지원하는 형태의 상생협력 모델이다.

협력업체에 재래시장 상품권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형태다. 협력업체들은 이런 지원을 받아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 방문, 따뜻한 명절 보내기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게 된다. 현대·기아차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협력업체에 8천5백억원 규모의 구매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도 했다.

은행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참여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상생경영 실천방안'은 과거 상생활동이 1차 협력사 위주였던 점을 감안해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1차 협력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2008년부터 상생협력실을 설치해 협력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다"면서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은 협력사와의 동반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에 다양한 경제·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생패키지론'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있다. 상생패키지론이란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이 결제대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기업의 신용을 기반으로 그 이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처럼 정부의 상생을 위한 공정사회 기반 조성 노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대기업이나 은행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공정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기업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등 각종 제도를 정비했고, 장애인연금 도입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제들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고용평등 등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나눔과 봉사문화의 사회적 확산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G

글·김성동 기자

여성·어린이 보호대책 대폭 강화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운 사회가 되더라도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성숙한 시민의식)를 건설하지 못하면 우리의 국가 목표인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근대사회 출현 이후 정부의 첫번째 존재이유가 되었으며, 성숙한 사회 건설은 우리 국부(國富)에 걸맞은 국격(國格)을 갖추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명박정부는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 확립'에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성적표를 남겼다.

치안분야에서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불법 고리(高利) 사채나 기타 민생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정부는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과 폭력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에 극심한 혼란과 피해를 가져왔던 불법파업이나 노사분규, 불법·폭력 시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이 한층 더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정부의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 확립'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 여성·아동의 안전 확립, 둘째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건설, 셋째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선진화, 넷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다섯째 국가 사이버 안전체계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각 항목의 성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성범죄 처벌 강화와 여성·아동의 안전장치 마련

성폭력 범죄자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하고,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2010년 11월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9백13명 중 성범죄 재범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이 15퍼센트가 넘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효과를 본 것이다.

살인·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자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조선DB

지난해 10월 15일 광주광역시청에서 법무부와 광주시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을 맺은 후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 다짐대회'를 열었다.

해 작년 11월까지 9천8백82명의 DNA를 확보했다. 앞으로 매년 3만명의 형 확정자나 구속 피의자들의 DNA를 채취할 예정이다.

성범죄 관련법도 대폭 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했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했다.

전국 검찰청에 여성과 아동 전용조사실(1천2백75건)을 설치하고 성폭력 전문가 72명을 위촉(2010년 1~11월)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민생사범 단속 등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처한 결과 2009년에 13건이던 폭력시위가 작년에는 4건으로 줄어들었으며,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폭력시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1천4백60명의 조직폭력범을 검거했고(2010년 1~11월), 외국인 조직범죄 예방을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해 1천3백여 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단속했다(2009년 10월~2010년 3월).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많은 성과를 남겼다.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불법 고리사채를 받는 사금융과 민생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17만2천6백27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9천7백여 명을 구속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장치도 대폭 강화했다. 위해상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POS),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안전식품 인증제(HACCP)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10년 소비자의 식품안전 불안감이 2008년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환자 수는 2007년에 비해 37퍼센트 감소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 질서 확립

법질서 확립을 위한 실천운동을 펼치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같은 지자체와는 먹을거리 안전 문제,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중앙회, 대한축구협회 등의 민간단체와도 법질서 확립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법사랑 통장' 출시와 법사랑 서포터스 발족 등을 통해 법질서 실천운동이 전 사회에 확산되도록 다양한 활동도 펼쳐졌다.

법사랑 통장은 법무부와 농협이 협약을 맺어 만든 것으로 통장 예금잔액의 0.1퍼센트를 적립해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등 법적 소외계층을 돕고, 기초 법질서 확립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법사랑 통장은 작년 12월까지 6만6천여 계좌가 개설됐고, 6천여억 원이 예치됐다.



조선DB

지난해 7월 8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부산지역 노·사·민·정 화합 실천결의 대회'에서 노사민정 대표들이 화합을 뜻하는 1백인분짜리 대형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13년간 유예되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도를 시행했다.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면서도 불합리한 노사 관행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는 등 노사관계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일관적으로 지키자 노동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해결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1백16건이었던 노사분규가 작년 동일기간에는 76건으로 줄었다(34.5퍼센트 감소).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20.7퍼센트 감소했다.

지난해 6월에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勞使政) 합의문을 채택했다. 그 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연차휴가제도 개선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망 분리 등 국가 정보자산 방어능력 향상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 사이버 안전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DDos 같은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점검대상 사이트를 20만 개에서 1백만 개로 확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을 개소했다.

올 1월에는 군에도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32개 공공기관의 망을 분리하는 등 국가 정보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켰다.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TV방송(550회), 스마트폰 정보보호 애플리케이션 개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캠페인 등도 실시하고 있다. G

글·이상흔 기자

국민 불편 해소에 중점… 현장감 높여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간 각종 규제를 개혁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총 6차에 걸쳐 수립된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통폐합 및 정원감축은 완료했고,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등은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0년 정부업무평가결과 보고회에서 '규제개혁'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규제개혁' 주요 평가기준은 31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관련 추진기반의 적실성, 시행의 적정성, 규제개혁 성과, 규제개혁 만족도 등이었다.

#2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010년 '모의법정을 도입한 맞장토론회' '규제개혁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고질적인 규제를 해결하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방호과 이동원 소방경은 주유소 등 위험물 관련 규제개선 공을 인정받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규제개혁 추진기반 강화

지난 3년간 정부는 현장감 있는 규제개혁 추진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국민불편법령 개폐백서' 발간사를 통해 "2008년 3월부터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발족하고 각종 법제도를 국민 위주로 개선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가고 있다"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출된 4천5백 건 이상의 개선의견 중 우선개선이 필요한 3백73건의 과제를 선정했고 이를 국무회의에 7차에 걸쳐 보고하여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 3월부터는 규제로 인한 개별피해를 구제하는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2011년 말까지 340여 개 법령을 정비해서 원칙허용·예외금지 인허가제도 전환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일정한 주기로 규제내용을 재검토하는 '규제 일몰제'를 확대 도입했다. 규제 일몰제는 존속 명분이 없는 규제를 일정기간 후에 없애는 것이다. 2010년 6월에는 일몰 적용 검토대상 규제 4천6백92건 중 1천44건(22.3퍼센트)에 대해 일몰을 설정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정부는 2010년 창업, 환경, 주거·복지 및 신성장 관련 규제 1천3백75건을 발굴해서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14건을 해소했고 농산어촌 현장의 애로사항 1백건의 개선을 추진했다.

정부는 영업자·종사자 등의 불요불급한 법정교육 31건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완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폐지 등으로 약 1백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국격 제고와 미래성장기반도 확충하려고 노력했다.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 지위 및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국적취득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증 반납기한 연장, 인터넷상 각종 사이트 가입 불편 개선 등이다.

도로, 철도 등 교통수단 간 연계 효율화로 친환경 녹색국토 기반을 마련하려고도 했다. 지선국도 선정기준 개선, 친환경 국도설계를 위한 설계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그 예다. 직진우선 신호체계 운영 등 교통운영체제 선진화 지속도 추진했다.

2010년 서울 및 6개 광역시 83개 주요도로 소통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행속도는 3.5퍼센트 증가(시간당 28.6→29.6킬로미터)했고, 지체시간은 11.3퍼센트 감소(초당 62.0→55.0킬로미터)했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현장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30곳의 현장 방문, 65회의 업종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5백25건 중 4백29건을 개선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업 규제개혁 만족도는 2009년 38.9퍼센트에서 2010년 41.6퍼센트로 상승했다.

공공부문 선진화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월 2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 선진화는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며 "그간의 선진화가 군살을 빼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체력을 키우고 체질을 개선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 6차에 걸쳐 수립된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통폐합 및 정원감축은 완료했고,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등은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 선진화 실적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 점검 및 관리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진화 워크숍, 선진화 실적 점검회의, 민영화 점검회의 등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자율권을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2010



조선DB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년 1월 경영성과가 우수한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계획한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점검했다.

농·수협 개혁 추진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지난 2월 8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제역 파동 때처럼 농민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방치는 농협의 역할이 아니다. 지난해 가을 배추 파동 때도 마찬가지다. 농민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에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정부는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2009년 6월 농협법을 개정하고 12월 시행했다. 중앙회장 간선·단임제 도입, 조합장 비상임화 등 지배·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1단계 개혁을 완료했다.

2단계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이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농협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를 연합회, 2개 지주회사(경제지주, 금융지주), 자회사 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지원에 집중, 수익사업은 기업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농협(NH)' 명칭사용료(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퍼센트 한도)를 신설했고, 경제·금융부문으로부터 연합회로의 수익 이전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이 농협법까지 개정이 마무리되면 1993년부터 15년 이상 끌어온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2012년 초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3년간 수협은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했다. 전문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 확립으로 경영효율을 극대화하고 일선 조합 및 조합원 지원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회장 비상임화 및 연임 제한, 이사회 권한 강화, 인사 공정성 확보, 전문경영인 유치를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일선 부실수협 조합장의 비상임화 등을 들 수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부는 2009년 11월~2010년 6월 KDI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력산업 정책의 불확실성 제거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산업 발전방안을 작년 8월 확정했다. 현행 한전, 한수원, 화력발전 5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발전회사의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려 한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발전자회사협력본부'를 설치해서 연료운송, 건설, 자재 등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했다. 책임경영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발전부문 경쟁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대 국민 전력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했다. G

글·서일호 기자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이명박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행정체제 개편, 광역경제권 개발 등은 지역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로써 상생과 통합의 지역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현 정부는 올해를 새로운 밀레니엄의 또 다른 10년을 여는 원년(元年)으로 보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다. 통합 창원시는 주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대한민국 1호 '자율통합도시'다. 이전부터 생활권이 같은 마산시·진해시와 더불어 창원시 통합 논의가 있어 왔지만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구역 통합이 가속화됐다. 현 정부는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지역 현안사업 지원 등 지방행정의 자율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 창원시의 출범도 지원해 왔으며 통합 후에도 창원시의 문화적·화학적 통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통합 창원시 출범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통해 "지역의 발전은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 정부는 5+2광역경제권 체계를 수립해 각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특성화 발전 전략을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창조적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기초생활권 잇는 3차원 발전 진행

통합 창원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 모델로 꼽힌다. 자율적인 통합으로 생성된 통합 창원시는 인구 1백8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21조8천억원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로 부상했다.

기초구역 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다.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향후 1백 년 역사의 틀을 만드는 중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과 도로망 확충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방행정체제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지방 영향력 강화, 국가 경쟁력 상승, 주민 편의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본격적인 개편 추진 여건이 조성됐다. 특별법에는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겨 있어, 통합 창원시의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기초생활권으로 이어지는 3차원 지역발전체제다. 이명박정부는 임기 전반기에 '5+2'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체제 구축을 통해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광역권별 패키지형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산업 발전·인력육성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배분 개선 및 지원체제 개편이다.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은 지난해 12월 〈매일경제〉 기고를 통해 "지방 소득·소비세 신설을 통해 매년 1조9천억원 이상의 재원이양 효과가 있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신설(향후 10년간 총 3조원 조성)을 통해 지방발전 재원확보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은 획기적인 제도적 진전이라고 평가할 만하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지역발전체제 1차원은 '기초생활권' 육성이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전국 1백63개 시·군 자율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유형별·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기초자치단체를 일반농산어촌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도서지역, 접경지역, 성장촉진지역 등의 유형별로 나눠 차등적으로 포괄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역 스스로 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둔 것이다.

2차원 지역발전체제로는 산업·인력·인프라가 연계된 광역경제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은 2개 이상의 광역시·도가 경제활동 연계성으로 통합된 권역을 말한다. 먼저 산업 부문을 살펴보면 정부가 지난해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한 '20개 선도산업육성 프로젝트'에 6백83개 기업이 참여했다. 1차년도 사업결과, 매출 8천9백70억원, 수출 4억6천만 달러, 신규채용 2천2백56명 등의 창출 효과가 있었다. 그다음 인력 부문에서는 선도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총 20개 대학을 지원해 6백 개의 맞춤형·융합형 교육과정이 신설됐다. 마지막으로 광역인프라 확충을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전선 진주~광양구간 복선전철,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노반공사, 원주~강릉 철도건설 등이 진행되고 있다.

3차원 지역발전은 초광역개발권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국제경쟁력을 지향하는 초광역개발의 기본 틀을 구축해 왔다. 지난해 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 등 4대 개방형벨트에 대한 종합계획과 내륙권에 대한 기본구상이 수립됐다. 여기에는 2020년까지 총 74

조3천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현 정부의 지역발전프로젝트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종시 건설이 대표적이다. 2012~2014년 정부부처 이전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인프라를 차질 없이 건설 중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첫마을아파트'가 1백퍼센트 분양되는 기염을 토했다.

세종시·새만금 등 지역발전프로젝트 안정적 추진

'세종시설치법' 제정 등 세종시 출범을 위한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청사 공정 관리, 공무원 이주대책, 정주환경 조성 점검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57개 이전대상기관 중 1백54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승인하고 한전 등 74개 기관의 부지매입 등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도 차근차근 수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주요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기초과학연구원·중이온가속기 건설, 비즈니스 환경 구축,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오랜 기간 끌었던 '새만금 종합개발'도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다.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새만금 기본구상 변경을 구체화하고 개별 토지용도별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용지별 개발전략과 기반시설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세부 마스터플랜은 올해 초까지 수립될 계획이다.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 19년간 끌어온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드디어 마무리됐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 및 대내외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에는 전북 익산시에 있는 왕궁 한센인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도 마련됐다. 왕궁 농원은 1948년부터 한센인이 일반인과 함께 축산활동을 해온 지역이다. 가축 분뇨로 인한 만경강과 새만금의 오염, 인근 지역의 악취, 농원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책임소재 논란과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 미해결 지역민원으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은 전북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건의받고, 현 정부는 지역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킨다는 책임의식하에 7개 관계부처가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으로 2015년까지 한센인 주거시설 신·개축, 가축분뇨 처리, 축사 매입 후 철거, 생태환경 복원 등에 총 1천1백59억원이 투자된다. 이는 소외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새만금 수질 개선과 한센인 생활여건의 개선이 예상된다. G

글·이제남 기자



조선DB

지난 19년간 끌어온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드디어 마무리됐다. 2010년 4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교육비는 줄이고 공교육 경쟁력은 높인다

교원평가 도입 등 '두 마리 토끼잡기'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입학사정관제 도입, EBS 수능강의 내실화, 고교 다양화 등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안으로 대표된다.

창의적 인재 뽑는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정부 지원으로 내실 있는 운영 토대가 마련됐다. 입학사정관제는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성적뿐 아니라 잠재력, 창의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다.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선진형 대입 전형이다.

도입 초에는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공정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우려가 많았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왔다.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로 뽑힌 인하대학교 신입생들이 날개를 활짝 편 포즈로 합격의 기쁨을 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입학사정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우수·선도 대학 등 총 60곳에 3백50억원을 지원했다. 2011학년도에는 전국 1백18개 대학에서 3만6천8백96명(전체 정원의 9.6퍼센트)이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될 예정이고 2012학년도에는 1백22개 대학, 4만1천2백50명(10.8퍼센트)으로 확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낙원 입학지원팀장은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인 전임사정관이 필요한데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대학들이 부담을 덜어 입학사정관제가 안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임사정관 수는 2007년 42명에서 2010년 5백12명으로 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지난해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훈련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7개 대학으로 늘리고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도 마련했다. 입학사정관제의 전문 인력이 확보되고 창의적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로 학교 현장도 달라지고 있다. 초·중·고에서 교과 중심의 수업을 벗어나 학생들의 인성향상과 진로고민을 돕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교실제, 교과중점학교 등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며 공교육 차원에서 입학사정관제 대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원평가 전면 실시로 공교육 질 향상

숙원사업이었던 교원능력평가제가 이명박정부 들어 전면 실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1년부터 교원능력평가제 도입을 검토해 왔으나 이해집단의 반대가 심했다.

정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2010년 3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전면 도입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란 교사들의 수업방식, 학생지도, 교사 자질 등에 대해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해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가져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정종철 과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정착되면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이 확대되고 교직사회 전체에

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올해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신학기부터 새로운 교원평가 모형과 평가 문항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별 학교 여건이 다른 점을 반영해 새로운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한 평가 문항을 새로 개발했다. 평가시기도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라 현장에 맞는 교원능력평가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DB

신성장동력분야 현장 기술 인재 양성

신성장동력 분야의 인재양성 노력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전통 기반산업 중심의 학과를 녹색·신성장동력 분야로 개편하고 있다. 한국폴리텍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 대학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기술인재를 길러 내는 직업교육대학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의 녹색·신성장동력 분야 중간기술인력 양성사업은 현 정부의 1백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13년까지 운영학과의 20퍼센트를 신성장동력 학과로 개편하고 미래산업 분야의 기술인력 1만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허병기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2009년 신성장동력 분야로 처음 개편된 13개 학과의 학생들이 올해 졸업한다"며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학과 개편으로 올해 취업률은 90퍼센트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학과 개편으로 삼성, LG 등 대기업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취업의 질도 높아졌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인력지원도 녹색산업 분야로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스스로 양성하기 어려운 용접, 설계, 선박 등 기간산업의 인력양성을 지원해 왔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신재리 사무관은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이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신성장동력산업의 인력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EBS수능강의 질 제고로 사교육비 경감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은 EBS를 방문해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EBS 수능강의만 듣고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EBS수능강의의 질 제고에 힘써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월 EBS에 '학교교육본부'를 설치하고 기존 교육연구소를 '교육방송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교육부문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스타강사의 지속적 영입, 우수교사 EBS파견제 도입, 다양한 맞춤형 강좌 제공 등으로 EBS수능강의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지난해에는 EBS수능강의와 대학수능시험 간의 연계를 70퍼센트로 강화해 사교육비 경감에 적극 나섰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EBS수능강의 이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수능사이트 EBSi의 VOD 이용건수는 2009년 31만4천2백54건에서 2010년 57만8천3백55건으로 대폭 늘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10년 EBS수능강의 성과분석 연구를 통해 EBS수능강의가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학생들의 EBS 수능강의 이용률은 84.3퍼센트에 달했고 학교시험과 모의고사에 도움에 된다는 평가는 89퍼센트 이상이었다. KEDI는 2010년도 EBS수능강의로 인한 경제효과를 최소 6천5백26억원에서 최대 9천8백86억원으로 추정했다.

곽덕훈 EBS 사장은 "올해 수능강의와 대학수능시험 간 70퍼센트 연계정책 시행 2년차로 EBS만으로도 수능대비가 가능하도록 연계강좌에 심화분석 강의를 신설하고 개념학습을 충실히 하기 위한 개념원리 강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문계고의 선도 모델 마이스터고 24곳 운영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자율형고 등 다양한 고교 도입 운영을 통해 고교선택권 확대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백50개의 기숙형고교를 지정했다. 기숙형고교는 현대적 기숙사 설비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 낙후지역의 학생들이 도시로 가지 않고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낙후지역의 고교가 '기피하는 학교'에서 '찾아오는 학교'로 바뀌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고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난해 자율형사립고(51개교) 및 자율형공립고(58개교) 운영을 시작했다. 자율형고교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학생의 학교선택권 강화 및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작년 3월에는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지향하는 마이스터고가 처음 문을 열었다. 현재 총 24곳의 마이스터고가 운영 중이다. 마이스터(Meister)는 독일어로 명장, 장인이라는 뜻으로, 예비 마이스터를 육성하는 마이스터고는 전문계고의 선도 모델이 되고 있다.

기업협약, 졸업생 채용 약정 등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기술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졌다. 지난 1월에는 삼성전자가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1백명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등 기업들의 반응도 좋다. G

글·이제남 기자

싸우면 이기는 강한 군대로 환골탈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크게 바꿔 놓았다. 지난 2006년부터 미래전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역량과 태세를 구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해 온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후 국방개혁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우리 군대가 국민의 군대, 전투형 군대로 재탄생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조선DB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10 동계 공군·지상군합동훈련에 참가한 육군 K-9 자주포들.


조선DB

청해부대의 피랍선박 구출을 계기로 지난 1월 11일 실시된 평택 해군2함대의 해상 대테러 훈련.

얼마 전 우리 군이 창군 이래 처음 여성학군장교(ROTC)를 선발, 여전사의 신화를 다시 쓰게 됐다.

육군은 2010년 11월 30일 여성 ROTC 제도 시험적용 7개 대학에서 선발한 60명의 여성 ROTC 후보생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필기평가와 인성검사를 통해 1차 합격자 1백20명(대학별 선발 정원의 2배수)을 선발한 뒤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 60명을 뽑은 것이다.

이들은 올 1월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실시된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정식 후보생이 됐다. 여성 ROTC들은 향후 2년간 남성 후보생들과 동일하게 학군단 교내교육과 입영훈련 등 장교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과 전기전술 등을 연마해 오는 2013년 첫 여성 ROTC 소위로 임관, 2년4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여성 ROTC 창설은 연평도 포격도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뤄져 더 큰 의미를 가졌다. 이들은 위기가 고조된 안보상황 하에서 군인의 길을 택한 여성들이란 점 때문에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010년 12월 10일 서울 청파동 숙명여대에서 열린 국내 최초 여성 학군단 발대식에서 이승우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은 훈시를 통해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해 한반도는 전환기적 안보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런 안보상황 속에서 뜨겁게 태어난 숙명여대 학군단 창설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군이래 첫 여성 ROTC 60명 선발

여성 ROTC는 정부가 2006년부터 추진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근거로 도입된 제도다. 원래 여성 ROTC 후보생 모집은 2014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앞당겨진 것이다.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진출 욕구를 반영하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군 장병들의 복무연한이 줄어들고 1자녀시대가 지속돼 남성만으로는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요소가 여성 ROTC 조기 창설의 이유가 됐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국방부가 2005년 9월 발표한 장기적 국방개혁안이다.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전에 부합할 수 있는 국

방역량과 태세를 구비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우리의 안보상황은 재래식 군사위협 외에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온 데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급변했다.

이에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실현 가능한 실용적 계획으로 보완하고 '정예화된 선진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가장 먼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나타난 우리 안보태세의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천안함 피격을 계기로 2010년 5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발족됐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국가안보태세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두 달 뒤 안보현실과 전비태세의 문제점을 분석해 15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전작권 연기등 안보태세 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같은 해 7월 국방부 산하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고 기구를 보강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도출한 15개 개선과제를 검토해 보다 구체화된 71개 과제를 내놓았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71개 과제를 제출하며 '선진강군을 위한 국방개혁' 기조로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 각종 군사도발에 대한 능동적 대응 ▲무형전력, 합동성 강화 ▲국방획득체계의 전문화 및 투명화 등을 건의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2010년 6월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재연기는 없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한국군의 독자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양국 사이에 형성된 것이다.

양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실무차원의 협의를 시작한 것은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계기가 됐다.

〈2010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명시됐다. 다만 '북한' 자체를 주적이라고 명기하지는 않았다. 이는 북한 주민은 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북한정권과 군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1967년 최초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5~2000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명기했다.

국방예산도 증가했다. 201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11년 국방예산은 북한의 연속 도발에 따른 전력보강 예산이 포함됐다. 총액 규모 면에서 2010년 대비 6.2퍼센트 증가했다.



조선DB

2005년부터 실전 배치된 F-15E를 개량한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

이는 정부예산 증가율(5.5퍼센트)보다 높다. 이번 국방예산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감시, 탐색장비 보강과 장병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됐다.

국방예산 증액… 북한 도발 대비에 집중 편성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취임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야전사령관 출신이란 점도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담겨 있다.

국민들의 안보 의식도 변화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란 유행어로 유명한 탤런트 현빈이 해병대에 지원해 '사회지도층의 탁월한 선택'으로 갈채를 받은 것을 비롯해 최근 육·해·공군의 모집병 지원율이 급상승,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병무청 집계 결과 2011년 1월 유급지원병, 기술행정병, 개별모집병 등 육군의 모집병 지원율은 4.5대1로 2010년 12월의 기록(3.4대1)을 넘었다. 이는 병무청이 육군 모집병 지원율 기록을 집계한 200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빈이 지원한 해병대의 모집병 경쟁률도 4.5대1로 가장 높았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젊은층의 안보의식이 굳건함을 보여준 결과다. 장한 젊은이들의 굳건한 조국애를 살려 나가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 시각에 입각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우리 군대가 국민의 군대, 강한 군대로 재탄생하도록 '확실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문화 복지카드 수급 1백63만명으로 늘어

이명박 정부 3년 성과 중 하나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들 수 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를 확대했고, 문화예술인의 창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으며, 광화문 복원 등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에도 힘썼다.



조선DB

무료관람을 위해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전시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문화·여행·스포츠 분야의 계층간 격차 감소

지난 3년간 정부는 국민의 문화·체육생활 기반을 확충하려고 노력했다. 그중에서도 생활 속의 국민 여가·복지를 강화하려고 했다. 먼저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Voucher)를 확대했다.

2010년 문화 분야에서는 67억원을 투입해서 35만명이 연 5만원 한도 내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하는 것을 보조했다. 올해는 문화 바우처 예산을 3백47억원으로 늘려 복지카드 수급 대상자를 1백63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월 27일 취임식에서 "문화적 소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 바우처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이것을 일회성이 아닌 항구적으로 구축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행 분야에서는 21억원을 들여 6천명이 연 15만원 한도 내에서 국내여행을 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39억원을 투입해서 1만3천9백명이 연 6만5천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강좌를 듣거나 스포츠 용품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올해는 체육 바우처 수혜 대상자가 3만4천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득계층간 문화격차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연간 예술행사 관람 횟수'는 전체 평균소득 가구 대비 소득 1백만원 미만 가구의 격차가 감소했다. 2008년 조사결과 약 9배가 차이 났는데 2010년에는 약 4.5배 차이로 줄었다.

서민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야간 연장 개장도 실시했다. 2008년 5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및 11개 소속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의 무료관람·야간 연장 개장을 한 것이다. 국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실시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관람객이 9백98만명에서 1천1백38만명으로 14퍼센트 증가했다.

또한 정부는 생활공감형 문화·체육 기반시설을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등 1백 개소의 건립을 지원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이 54개, 문예회관이 17개, 공립박물관·미술관이 29개다. 국민 문화시설 이용률은 7퍼센트포인트 증가했다. 2008년 조사결과 45.2퍼센트였는데 2010년 조사결과에서는 52.2퍼센트로 늘었다.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2백10개소가 신규 조성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체육센터 20개, 생활체육공원 11개, 노인건강체육시설 7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5개,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1백40개 및 다목적 체육관 27개를 신규로 조성했다.

국민 생활체육시설 이용률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도 증가했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2008년 34.2퍼센트에서 2010년 41.5퍼센트로 늘었고,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2008년 2.54제곱미터에서 2010년 3.20제곱미터로 증가했다.

대학로 '예술가의 집' 조성 등 현장중심 정책 운용

정부는 지난 3년간 문화예술인의 창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개편된 예술지원 방식에 따른 현장중심 정책을 구현하려고 했다. '선택과 집중' '사후·간접지원' '생활 속 예술'의 지원방식을 정립하려고 노력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예술창작 및 발표공간 지원,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우수작품 사후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또 문예기금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해 현장밀착형 지원을 추구했다. 2009~2010년 3백76억원을 지역에 이관한 것이다. 지원심의의 공정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심의제도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책임심의위원제(분야별 5인 구성) 도입, 국민평가단 운영, 사후평가제 등이다.

정부는 공공의존도에서 탈피해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술단체를 육성하려고 노력했고, 국립 예술기관의 재도약을 위한 창작여건을 개선하려 했다. 2010년 6월 국립극단을 법인화했으며 2010년 7월 국립현대무용단을 신설했다. 국립예술단체의 초대 관행을 개선하려 했고 국립 예술단체의 기량향상을 위한 오디션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말에는 창작지원 공간인 '예술가의 집'이 서울 대학로에 세워졌다. 경성제대, 서울대 본관으로 쓰였던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물이 '예술가의 집'으로 새롭게 문을 연 것이다.

'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로 역사문화 향유공간 조성

지난 3년간 정부는 광화문 복원 등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에도 힘썼다. 상징적 문화유산 복원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광화문 제 모습 찾기가 있다.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광화문 등 건물 7동, 어도 1백 미터, 궁장 3백30미터 복원, 지반정비 등 사업을 진행했다. 2010년 8월 15일에는 광화문 개문의식 및 현판제막식 행사를 열었다. 또 덕수궁 중명전을 복원해서 개방했다.

1905년 을사늑약과 1907년 헤이그특사 파견 현장인 덕수궁 중명전을 2007~2010년 원형대로 복원해서 2010년 8월 29일 개방했다. 덕수궁 중명전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문화유산국민신탁의 김종규 이사장은 "이곳에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됐고, 고종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원래 덕수궁의 일부였는데 일제 강점기 때 궁이 쪼개지면서 독립 건물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를 통한 역사문화 향유공간을 조성하려고 노력했다. 창덕궁 연경단 등 궁궐 주요 전각의 개방 및 활용을 확대했다. 궁궐별 특화된 의례재현 등 왕실생활 및 궁궐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했고, 고궁에 대한 특별한 경험과 다양한 관람기회를 부여했다.

행복을 충전시켜주는 복지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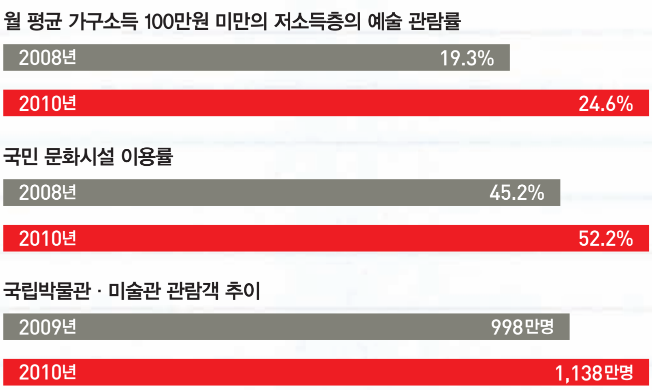
복지관광은 취약계층의 장애인, 노인,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순히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세상과 연결하는 징검다리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복지관광은 취약계층에게 작은 행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관광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그리고 다문화가족 등으로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여행을 하기가 어려운 이들이다.

복지관광을 주관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우리 국민의 국내 여행 경험률은 92.3퍼센트에 이르지만 복지관광 대상자 5백63명 중 69.4퍼센트인 3백91명은 숙박여행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55.3퍼센트인 3백11명은 당일여행 경험조차 없었다. 이들에게 관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것이 복지관광이다. 복지관광은 복지관과 복지시설을 통해 신청을 받아 국내 단체관광을 하는 것으로, 1인당 최고 15만원까지 여행 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2009년에는 4천7백46명이 지원을 받았고 2010년에는 5천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복지관광은 기본적으로 복지관 등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2009년부터는 개별신청 형태의 특별행사도 벌이고 있다. 설이나 추석 명절 전후, 가을철 등에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가족여행도 실시하고 있다.

글·서일호 기자




조선DB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만난 박부자 할머니. 이날 박 할머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목도리를 선물받은 후 '목도리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었다.


조선DB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만난 강계화 할머니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소개해 감동을 줬다.

'목도리 할머니'부터 한주호 준위 유족까지

청와대 밖으로 다양한 계층과 소통 행보

취임 3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문턱을 한층 낮추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과 소통했다. 스포츠스타를 키운 어머니, G20세대, 전통시장 상인도 이 대통령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수시로 진행된 현장 시찰을 통해 서민들의 고충을 듣기도 했다. 그중 화제가 됐던 만남도 많았다.

가락시장 '목도리 할머니'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좌판에서 무청을 모아 파는 박부자 할머니는 2008년 12월 4일 새벽, 현장 시찰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던 주인공이다.

당시 박 할머니는 "(내가) 못 배워서 말은 할 줄 모르고,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은 얼마나 힘드시겠느냐'"며 힘든 처지에도 대통령을 위로했다. 이어 "경제가 좋아져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 편해지도록 해 줬으면 한다"고 전해 이 대통령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20년 동안 둘렀던 목도리를 박 할머니에게 선물했고 박 할머니는 이날 이후 '목도리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었다. 1년 뒤, 2009년 12월 24일 박 할머니는 '일하는 어려운 이웃' 청와대 행사 때 초청돼 다시 한 번 대통령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첫 만남 이후 유명세를 치렀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박 할머니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좌판에서 무청을 팔고 있다. 박 할머니는 "한동안 찾아오는 사람들(기자 등)이 많아 고달펐지만, 이제는 괜찮아졌다"며 "하루빨리 날도 풀리고 경기가 좋아져서 장사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리농산물시장 '착한 상인들' 강계화 · 윤영임씨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 상인이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걱정해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경우도 있다.

지난해 9월 2일 이 대통령은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추석 전 물가를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새벽 6시에 시장에 도착해 채소동, 과일동, 경매동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현장에서 이 대통령은 상인에게 농산물의 가격을 직접 물어보며 물가를 점검한 후 시장 사무실에서 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감동시킨 두 사람이 있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채소상을 하는 강계화 할머니와 이웃 상인 윤영임씨다.

강 할머니는 당시 자신의 가게에 방문한 이 대통령을 보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서 혼자서 어렵게 아들 둘을 키우며 채소를 팔고 있는 윤씨를 소개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얘기할 천금의 기회를 양보한 것이었다. 윤씨 역시 이 대통령의 방문에 눈물을 흘리며 "나보다도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다"며 "경제가 잘돼서 장사가 잘되게 해 주면 좋겠다"고 말해 이 대통령의 마음을 울렸다.



조선DB

김윤옥 여사(가운데)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하인스 워드 선수와 어머니 김영희씨(오른쪽 두번째), 장애인 수영선수 김세진 군과 어머니 양정숙씨(맨 오른쪽)가 나란히 섰다.



이경민

김윤옥 여사는 고 한주호 준위 유족을 초청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유족은 오히려 실종자 가족을 걱정했다.

인사동 풀빵장수 손병철 · 김숙경씨 부부

어린 시절 풀빵 장사를 해 봤던 이 대통령에게 풀빵은 향수가 어린 먹을거리다. 지난해 9월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만났던 인사동 풀빵장수 손병철 · 김숙경씨 부부를 방송을 통해 재회한 일도 있었다. KBS '아침마당'에서 깜짝 초대한 풀빵장수 부부는 방송에서 "이 대통령께서 시장시절 풀빵 굽는 노하우를 '전수'해 준 후 장사가 더 잘됐다"고 수화로 전한 바 있다.

대통령 부부 울린 자원봉사자 가족 김숙자씨

대통령 부부를 울린 사람도 있었다. 봉사활동 중 사망한 딸 고(故) 심민정씨의 뜻을 이어받아 딸의 장례식 조의금 3천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꾸준히 나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숙자씨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나눔 봉사 가족 초청' 행사에서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를 졸업한 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간염에 걸려 숨진 딸의 사연을 소개했다.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딸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며 "딸보다 더 열심히 나누며 살아야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던 김씨의 사연을 듣고 이 대통령 부부는 차마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발표가 끝난 뒤 대통령께서 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신 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다"고 만남 소감을 밝혔다.

G20세대 김남호 · 박지현씨 등

지난 1월 11일 G20 정상회의의 후속 종합보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엔 'G20세대' 들도 함께했다.

미국 하버드대를 휴학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박지현씨와 파라과이 오지에서 봉사단원으로 활동하고 돌아온 김남호씨, 에미레이트 항공사에 취업했던 윤현씨, 그리고 손가락 부상을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강주미씨 등이 대표적인 'G20세대'로서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발표를 듣고 "나도 'G20세대'의 심정으로 정책을 세우겠다, 앞으로 'G20세대'에 맞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며 G20세대 후원 의지를 밝혔다.

장한 어머니 하인스 워드 어머니 등

스포츠스타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 김영희씨는 이국땅에서 홀몸으로 청소부 등 막일을 전전하며 혼혈 아들인 워드를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최정상급 스포츠 스타로 키워낸 '장한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다.

장애인 최연소 로키산맥 등정, 세계장애인수영선수권 3관왕 등으로 유명한 장애인 유소년 수영선수 김세진군의 어머니 양정숙씨는 양다리를 쓰지 못하는 김군을 2살 때 보육원에서 입양, 친자식 이상의 헌신과 사랑으로 키워낸 인물이다.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지난해 5월 6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위대한 모자' 2쌍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다.

의로운 죽음 한주호 준위 유족

김윤옥 여사와 고 한주호 준위 유족들과의 만남도 빼놓을 수 없다. 김 여사는 천안함 실종자 구조작업을 벌이다 순국한 고 한주호 준위의 부인 김말순씨와 딸 한슬기씨를 지난해 5월 7일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한 준위의 희생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에 김씨는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일을 당했지만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젊은 아들을 잃은 유가족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한다"고 전해 김 여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G

글 · 박근희 기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상대 교수

“한국경제 지난 3년 성적표는 최상급”

윤창현 교수는 신속한 위기극복만으로도 정부의 지난 3년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도 잘했지만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지난해 OECD 경제성장률 2위, 수출 세계 7위를 기록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복남 기자

윤창현 교수는 절대적인 수치보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통해 정부의 성과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경제 부문의 지난 3년간 성적은 최상급이었다.

“2009년 GDP 성장률이 0.2퍼센트였습니다. 일각에선 실망스러운 수치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한국의 GDP 성장률은 OECD 3위에 해당했습니다. 경제 분야의 성과는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상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라는 환경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지난 3년 한국의 경제성적표는 대단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상대 교수는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6.1퍼센트의 GDP성장률을 기록하며 OECD 2위를 차지했고 서울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며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도 마련했다는 것이다. 녹색성장과 서비스산업 강화도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정책으로 꼽았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특히 환율 문제에 대한 비판이 상당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는 외환에 민감한 구조입니다. 지난 IMF 외환위기도 그랬지만 이번 금융위기에서도 외환이 대거 유출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2008년엔 무역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달러가 부족해진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를 확보하는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도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그 후로 환율이 급속히 안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무역 부문에서도 발전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올해 무역 1조 달러 돌파를 내다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개방으로 성장했고 앞으로도 개방을 통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점에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만큼 경제영토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FTA는 긍정적입니다. FTA는 관세를 낮추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수입물가도 하락합니다. 그만큼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한국을 보는 세계인의 시각이 달라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제법이다, 같이 얘기해야 할 파트너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국격’이 높아진 셈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과



조선DB

한국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보여줬다. 수출액이 사상최대 기록을 연이어 갈아치울 정도로 급증하면서 GDP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거에 비해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으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원인과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산업들은 고용창출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과거 10억원의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선 20명의 고용이 필요했지만 이젠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주력산업인 IT는 5.7명에 불과합니다.

해결책은 결국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금융과 보건의료, 법률, 회계 등 서비스업이 대표적입니다. 서비스업은 10억원 부가가치에 18명의 고용을 창출합니다.

서비스업종이 고급 일자리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1년에 50만명의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나오는데 이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일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서비스업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의 대표격인 금융산업의 발전이 다소 더뎌 보이는데요.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무작정 금융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위기를 몰고 온 미국이나 유럽과 다른 차별화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이 시속 200킬로미터로 가다가 사고가 나서 100킬로미터로 속도를 제한했다면 우리는 시속 50킬로미터로 가고 있었으니 적어도 70~80킬로미터 정도까지는 속도를 높여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규제의 대상이 아닌 중요한 서비스산업으로 봐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금융은 반드시 발전해야 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투자은행(IB)과 헤지펀드 부문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합니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시장친화적으로 개정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올바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적극적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물가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세계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에서 저렴한 제품이 쏟아져나오면서 '고성장 저물가'라는 행복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른바 '골디락스(goldilocks) 경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역 골디락스 경제'의 시대가 왔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역으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진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은 금리와 환율 등 거시적인 대응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계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에 대한 물량 확보 차원에서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합니다.

절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대해야겠습니다.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통화량보다 공급부족 탓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G

글·변형주 기자

최정화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문화바우처, 곧 놀라운 변화 가져올 겁니다"

최정화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는 "유럽인들은 오래된 건물과 유적을 보존하고 그 속에서 선조들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간다"며 "우리도 온고지신 정신으로 옛것을 지키면서 전통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간다면 중국이나 일본과는 차별화되는 우리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글로벌시대의 국가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려 했다는 데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월드컵 개최, 그리고 지난해에 G20까지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외국에 알리려고 시도한 적은 별로 없었지요.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그 기초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첫술에 배부를 리 없겠지만, 계속 먹다 보면 언젠간 배가 부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문화정책이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어떤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돌아온 최정화 교수(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의 답변이다.

국내에서 '국제회의 통역사 1호'로 잘 알려진 최 교수는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 연구원(CICI) 이사장'이라는 직함도 갖고 있다. 2003년 6월 연구원을 설립한 최 교수는 매년 한국 이미지를 알린 사람·단체·기업에 상을 주고 있다. 이미지 전문가인 셈이다.

국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 정책의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요.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한다거나,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시키는 등 일반 사람들도 한국 문화를 편하게 가



조선DB

광화문 앞에서 열리는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을 관람하고 있는 시민들. 경북궁 정문인 광화문은 2010년 8월 복원됐다.

서 구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점이 제일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공연이나 박물관을 편하게 다니기는 힘들지요. 경제적 문제도 있고요. 무료 관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정부와 비교해 일반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얼마나 확대되었다고 보십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닦고 있다고 봅니다. 일상생활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을 쉽게 느끼지요.

예전에는 강연을 듣거나 공연을 보거나, 어떤 문화 활동을 하려 해도 시간과 금전적인 문제로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시간을 내면 이것저것 다양한 문화 공연을 비교적 손쉽게 접할 수 있지요.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외계층은 경제적, 공간적인 여건으로 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번 정부의 문화복지 정책은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료 공연의 수준을 올린 것, 박물관과 미술관 무료입장, '찾아가는 예술단' 등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 점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대한민국 학생들이 문화 예술, 체육 분야를 더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입시 위주 경쟁 사회에 익숙해지다 보니 정작 심신을 건강히 단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고 지내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국가에서 문화 예술 및 체육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



조선DB

"기초 수급 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바우처 사업은 편리하고 쉽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잔하면서도 놀라운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장려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화를 향유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현 정부의 화두 중 하나가 '상생'입니다. 정부의 상생을 위한 대표적 문화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활동을 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요. 정부의 문화와 사람이 함께 어울리며 상생하며 융화하는 사회 추구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수급 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바우처 사업은 편리하고 쉽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의 문화정책이 유지된다면, 잔잔하면서도 놀라운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광화문 복원 등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작업이 활발한데 이러한 작업들이 국가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럽을 가보면 고대 문화의 건물과 유적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국민들은 그 속에서 선조들의 숨결을 느끼며 현대를 살아갑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서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해 옛것이 많이 파괴되었지요.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광화문 복원 같은 전통문화 계승작업은 상당히 고무적이지요. 온고지신의 정신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옛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발전시켜서 대내외에 알린다면 이웃인 중국이나 일본과는 차별화되는 우리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 문화정책 중 아쉬운 점은 없습니까.

기존의 특정 소수만을 위한 엘리트 제일주의를 지양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열악하다는 점이 아쉽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런가요?

예를 들면 레지던시 프로그램(창작스튜디오로 1997년부터 시작되어 일정한 공간에 작가들이 복수로 거주, 창작·교류하며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공동 또는 공공의 창작 시스템)은 특정 계층이 주류로 독점하던 미술계에 비주류로 분류되던 다양한 성향의 작가들이 진출할 수 있는 등용문을 제공하고 있지요.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베네수엘라의 엘시스테마처럼 소외된 계층에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전문가로 키워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문화란 빛에 그늘이 없는 진정한 문화 선진국에 되지 않을까요? G

글·김성동 기자

시나리오 작가가 그리 힘들게 살다니…

최고은씨 요절로 영화계 열악한 환경 사회문제로 대두

신인 시나리오 작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얼마나 열악하기에 작가 최고은씨는 월세방에서 요절했을까. 시나리오 작가들은 4대 보험 등 사회 안전망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작가들은 시나리오를 홀대하는 영화계 풍토를 더 근본적 문제로 보고 있다.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32)씨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 단칸방에서 이웃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1월 29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의 이웃집 현관문에는 '그동안 너무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이웃 송모(50)씨는 "최씨가 그전에도 몇 차례 밥과 김치를 좀 달라고 쪽지를 남겨서 갖다주곤 했는데 일이 있어 집을 며칠 비웠다가 돌아와 쪽지를 보고 찾아가 보니 이미 숨진 뒤였다"고 했다.

'남는 밥이랑 김치 있으면…' 쪽지가 마지막 유서

최씨는 주로 중국 동포들이 살던 월세 20여만 원의 단칸방에서 1년여를 살았다. 기름이 없던 보일러는 작동 안 한 지 오래였고 최씨는 차가운 전기장판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집에는 먹다 남은 빵 반 조각과 라면 5개가 남아 있었다.

휴대전화는 요금을 내지 못해 끊겨 있었다. 최씨는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지도 않았다. 안양시청 관계자는 "최씨가 원했다면 최장 6개월까지 쌀, 의료비 등을 무상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최씨는 2007년 '영화 엘리트'의 산실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를 졸업한 뒤 영화 제작사와 시나리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고 최고은 작가가 각본·연출을 맡았던 영화 '격정 소나타'의 한 장면.

영화 제작까지는 이어지지 못해 최근까지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재학시절 각본을 쓰고 직접 연출까지 맡았던 단편 '격정소나타'(2006)가 유작이 됐다. 이 작품으로 그는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에서 '오늘의 얼굴상'을 받았다.

경찰은 "부검 결과 최씨의 지병이던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인한 돌연사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했다. 유가족은 지난 2월 1일 최씨를 화장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2월8일 성명서를 통해 "한 젊은 시나리오 작가가 병마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은 사실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이웃에게 음식을 부탁하는 쪽지였다니 말문이 막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누기 어려울 지경이다"고 밝혔다. 또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고(故) 최고은 작가는 실력을 인정받아 제작사와 시나리오 계약을 맺었지만 이 작품들이 영화 제작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전해진다. 입버릇처럼 되뇌었다는 '5타수 무안타'라는 자조적 표현이 고인이 처했던 절망적 상황을 일부나마 짐작케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신인 시나리오 작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얼마나 열악하기에 작가 최고은씨는 이웃집에 밥과 김치를 부탁하는 쪽지를 남기고 월세방에서 숨졌을까. 우리 영화계에 구조적 문제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가 최근 6년 새 반 토막(2004년 41억6천만원→2010년 21억6천만원) 나면서 영화계 전체가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극장과 투자사, 감독과 배우에 비해 절대적 약자인 시나리오 작가와 조수급 스태프들에 훨씬 더 가혹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1년 내내 노트북 두드려도 '연봉은 고작 3백만원'

한 무명 시나리오 작가는 "내 연봉은 3백만원"이라고 했다. 상업영화 경력이 없는 신인 작가가 운 좋게 영화 제작사와 계약을 했을 때 시나리오 한 편 고료는 대략 2천만~3천만원. 문제는 최근의 불황으로 이런 기획개발비를 부담하던 투자사가 지갑을 꽁꽁 닫아버렸다는 데 있다.

제작사는 자체적으로 이 중 일부(가령 3백만원)를 지급하고 시나리


부산영상위원회

영화계의 불황 때문에 시나리오 고료와 스태프들의 인건비가 더욱 줄어들었다.

오 기획 개발을 시작하지만, 완성된 시나리오가 투자사의 관문을 통과할 확률은 10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이후는 시나리오 개작(改作)의 무한 반복. 신인 작가는 1년 뒤에도 노트북을 두들기지만 그 시나리오가 영상으로 바뀔 때까지 잔금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

게다가 창작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작가들은 4대 보험 등 사회 안전망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류형진 연구원은 "촬영이나 조명 분야 조수급 스태프들과 달리 시나리오 작가는 감독급으로 포함된다"고 했다. 최저생계비 수준이지만 그나마 임금 가이드라인이라도 있는 다른 스태프들보다도 못한 연봉의 작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이런 비극적 상황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뭘까. 표면적으로는 영화계의 불황 때문이다. 2004년 '거품' 소리까지 들으며 40억원대 초반까지 올랐던 평균 제작비는 지난해 21억6천만원으로 반 토막 났다. 특히 광고와 프린트 비용을 제외한 순제작비는 지난해 14억2천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감독이나 배우의 개런티보다 시나리오 고료와 스태프들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더욱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고 불황의 그늘 속에서 제작사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투자사가 기획개발비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하면서 도산하는 제작사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성 인기작가와 유명 감독이 CJ엔터테인먼트·롯데엔터테인먼트 등 투자배급사와 직계약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신인의 경우는 아예 데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 작가들은 시나리오를 홀대하는 영화계 풍토를 더 근본적 문제로 보고 있다.

시나리오 작가조합 김희재 대표는 "신인이건 기성작가건 작가들은 시나리오를 넘기는 순간 영화의 밸류 체인(value chain·이익 분배구조)에서 소외된다"고 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 영화 순제작비 가운데 시나리오가 차지하는 원가비율은 1.64퍼센트이다. 20.17퍼센트인 배우 출연료의 12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실업 부조금 지급·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아쉬워

20억원짜리 영화라면 시나리오의 값은 3천만원을 조금 넘는 셈이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푸대접을 받는 상황이 인력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금은 충무로를 떠난 전직 영화 시나리오 작가 A씨는 "재능 있는 여성 작가들은 모두 충무로를 떠나 방송 드라마 쪽으로 옮겼다"면서 "그나마 남아 있는 사람은 자기 시나리오를 갖고 감독 입봉(데뷔)을 꿈꾸는 남자 시나리오 작가들"이라고 했다.

영화산업노조(위원장 최진욱)는 지난 2월 8일 '고(故) 최고은 작가를 추모하며'라는 성명을 내고 "영화 인력의 반복되는 실업기간에 영화발전기금으로 실업 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창작 소질을 갖춘 작가 지망생과 해당 분야 10년 내외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4대 보험과 지원금 등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영화계와 정부 소관 부처가 이렇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인재들은 충무로를 떠나고 있고, 한국 영화의 품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G

글·어수웅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국회 문방위 최문순 의원

"예술인 법적 지위 인정하고 예산 지원해야"


연합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예술인 지원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술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정부가 국가예산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술인 복지법'이 정부 부처의 반대로 3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문순 의원은 "2009년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창작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그런데 이 법안이 법무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의 반대로 문방위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반대로 3년째 상임위 계류 중"

그는 "법무부가 '예술인' 개념 정의에 대해 포괄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술단체의 난립과 국가예산낭비'를 우려했고, 근로인정문제에 대해서도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 지위인정은 법 적용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법안 논의 과정에 예술인복지재단의 신설문제에 대해서 예술인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타 업계종사자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법안에서 이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하면서 "노동부는 공적지원을 매개로 한 실업급여·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작년 유네스코 가입 60주년을 맞이했지만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UNESCO Recommendation on the Artists)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국 사례도 소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기초예술인의 복지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선진국들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네스코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도 못따라"

프랑스의 경우 '엥테르미탕'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공연·영상 분야의 비정규직 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술가들의 작업이 프로젝트 단위로 이뤄진다는 특성을 반영해 수급자격, 기간, 금액 등의 기준을 낮춘 특별실업보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국가와 저작권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예술인 사회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로 예술인들은 연금, 의료보험 및 요양보호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특히 신인들은 특별 제한 없이 3년간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미국 작가조합'이 직접 나서서 시나리오 작가들의 권익을 대변해 준다. 미국 작가조합은 미국영화방송제작가연맹과 협상해 '최소 기본 협정'을 마련한다. 최저 고료, 부가 수익, 연금에 관한 내용 등으로 3년마다 조정한다. 회원 수는 2만여 명이다.

작가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규정도 있다. 해고할 경우 3주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작가들을 위해 조합 차원에서 연금 계획과 건강 기금도 마련했다.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하는 총 임금의 6퍼센트를 연금 계획에, 8.5퍼센트를 건강기금에 내놓아야 한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도 유네스코 회원국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끄럽게도 젊은 예술가의 안타까운 죽음을 겪고 나서야 이렇게 새삼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착잡하다"면서 최근 요절한 최고은 작가의 명복을 빌었다. G

글·서일호 기자



제주도는 문명과 조화를 이루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한 표 부탁하우다

“올 11월 11일은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는 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주관하는 스위스의 비영리재단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순위에서 제주도가 최종 후보지 28곳 가운데 14위 안에 속하는 상위그룹에 진입했다. 최근 4주간의 지지성장률은 1위를 기록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에는 현재 제주도와 그랜드캐니언, 아마존, 이구아수 폭포, 킬리만자로, 몰디브 등 최종 후보지 28곳이 경쟁하고 있다. 각 국가 간의 투표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인터넷 투표와 전화 투표를 집계해 오는 11월 11일, 최종 7대 경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 4백41곳 중 동북아시아에선 대만의 유산과 함께 28위 최종후보지에 이름을 올린 제주도의 선전 소식이 전해지자 ‘7위 입성’을 향한 범국민적 캠페인도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고두심·박지성 등 스타들 홍보 나서

제주도 출신 배우 고두심씨를 비롯한 연예인, 스포츠스타와 더불어 정계도 발 벗고 나섰다.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홍보대사 단장을 맡고 있는 고두심씨는 “1백40원 정도 드는 전화 한 통이면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돼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면서 “국가 브랜드를 위해 1백40원 아끼지 말고 전화 투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1백40원 애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제 올해 11월 11일이 예년과 다름없이 ‘빼빼로데이’로 남느냐,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일’로 기록되느냐는 국민의 관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는 친환경적인 국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뉴세븐원더스가 2007년 진행했던 ‘세계 신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된 페루의 마추픽추는 70퍼센트, 요르단의 고대도시 페트라는 62퍼센트 관광객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세븐원더스 측은 이번 선호도 투표에서 약 1억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선정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투표는 전화 투표와 뉴세븐원더스 홈페이지(www.new7wonders.com)를 통한 인터넷 투표로 진행한다. 인터넷 투표보다는 전화 투표가 간편하다. 전화 투표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터넷 투표가 가능하다. G

글·박근희 기자 / 사진·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 참여 방법

▶ 001–1588–7715로 전화를 건다. ▶ 사무국 직원의 영어 안내 멘트(60초)와 ‘삐’ 소리 청취 후 ▶ 7715(제주도 선정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한다. ▶ 감사 인사말이 나오면 전화를 끊는다. 제주도 코드입력까지 마치면 1분30여 초, 국제전화 사용료 1백44원(KT인터넷 전화 100원) 정도의 요금이 발생한다.

·투표마감은 11월 10일



강원도 화천군 다목리 감성마을에 새 둥지를 튼 작가 이외수씨. 그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인데 과거처럼 궁상스럽게 살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간달프님, 서울 다녀가셨다면서요?"

이외수 작가, 화천 경제 돕고자 특산품 찐빵 · 감자떡 홍보하러 상경

'화천 산천어축제'가 구제역으로 취소돼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생겼다. 이 지역에 사는 이외수 작가가 직접 나서 트위터로 찐빵과 감자떡을 홍보하면서 전국으로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지난 1월 27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최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설맞이 구제역 피해지역 특산품 직거래 장터'의 강원도 화천군 부스를 다녀간 이외수 작가는 팍팍한 세상을 보듬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삶에 지쳐 감성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날카로운 시선을 담아 세상을 이겨내는 자세를 일러주던 이외수 작가는 최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며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내가 사는 마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소설가랍시고 소설만 쓰고 있을 수는 없지요. 오늘도 화천 감자떡 팔기는 계속됩니다. 시간 있는 대로 다른 지역 특산물도 광고해 드릴 예정입니다. 서울광장에서 뵙겠습니다. 포옹과 인증샷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2011년 1월 28일 금요일 @oisoo

1년 동안 40여억 원이 투자된 '제9회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가 구제역으로 취소되자 이미 구매해 둔 농특산물과 산천어 처리 문제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생겼다. 이때 이외수 작가가 직접 나

조선DB

서 트위터로 찐빵과 감자떡을 홍보하면서 전국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덕분에 초상집 같았던 지역 분위기가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이외수 작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향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설맞이 구제역 피해지역 특산품 직거래 장터'의 강원도 화천군 부스에 힘을 보태려 한 것이다.

그의 지속적인 트위터 생중계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화천 부스를 찾았다. 심지어 그의 트위터를 보고 멀리 지방에서 올라온 이들도 있었다. 작가는 찐빵과 감자떡을 일부러 사러 온 시민 한 명 한 명과 즐겁게 인증샷을 찍으며 행사장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화천군은 그의 지원에 힘입어 이날 준비한 찐빵 70박스, 감자떡 60박스를 모두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

'젊었을 때는 가끔씩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예술에 내 목숨을 바치고 최선을 다해 본 다음 그래도 세상이 나를 보듬지 않으면 그때 자살을 해도 늦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어느새 이순(耳順). 이제는 내가 세상을 보듬을 차례다.'

(〈코끼리에게 날개 달아주기〉 중에서)

트위터로 세대의 벽을 뛰어넘는 소통

이외수 작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를 이용해 독자들과 소통해 왔다. 개인 홈페이지부터 트위터까지 자유자재로 매체의 특성을 이용해 세상사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마음껏 펼치는 중이다.

작가가 날마다 실어 올리는 트위터의 1백40자 안에는 자기반성부터 문학과 예술에 대한 심오한 결과, 그리고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는 명철한 시각이 담겨 있다. 그렇기에 60만명이 넘는 팔로어들이 열광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국내 언론은 물론 작년 9월에는 일본 '아사히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다.

'저는 날마다 밥상을 차리는 기분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립니다. 당연히 고소한 음식, 달콤한 음식만으로는 맛있는 밥상이 될 수가 없겠지요. 더러는 매운 음식도 섞여 있고 짠 음식도 섞여 있어야 맛있는 밥상이 되겠지요. 무료급식인데 둘러엎지는 마옵소서.'

– 2010년 12월 27일 @oisoo

이외수 작가의 장편소설 〈장외인간〉에는 리니지 게임을 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메일을 사용하거나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은 동시대 작가들과 달리, 작가는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해 독자들과 소통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작가로서는 드물게 TV 토크쇼와 CF에 출연하는가 하면, 라디오 프로그램의 DJ로 독자들과의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그의 소설은 혼탁하고 물욕으로 가득한 세상의 정반대인 '선계'를 구원의 지점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세상을 차마 등지지 못하고 차라리 더 껴안고 보듬으려 한다.

작가의 첫 장편소설 〈꿈꾸는 식물〉을 읽은 문학평론가 김현은 생전에 그를 윤동주, 이상, 앙리 미쇼에 견주며 "세계를 달리 보는 감수성"을 지닌 작가라고 극찬했다.

밀린 방세를 갚으려고 첫 소설을 썼다는 그는 처녀작 〈견습 어린이들〉이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덜컥 당선되자, 괜한 죄책감에 산골로 들어가 문장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이후 학원 강사, 연탄배달까지 하며 〈장수하늘소〉 〈들개〉 〈칼〉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어떤 독자가 내게 물었다. 글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대답했다.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독자가 다시 물었다. 지겹지 않으세요. 내가 다시 대답했다. 글이 저를 지겨워하겠지요.'

(〈아불류 시불류〉 중에서)

2005년 장편소설 〈장외인간〉 발표 이후, 이외수 작가는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 〈하악하악〉 〈청춘불패〉 〈아불류시불류〉 등의 감성 에세이로 독자들에게 친근한 '꽃노털 옵하'의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다.

사인회마다 독자들의 행렬이 서점 입구까지 길게 이어짐에도, 서너 시간은 거뜬히 소화해 내는 이외수 작가.

사인회를 찾는 독자들의 모습은 저마다 제각각이다.

책 표지마저 조심스럽게 넘겨야 하는 작가의 초판본을 품에 고이 안고 오는 중년의 독자가 있는가 하면, 트위터에 올릴 인증샷을 부탁하며 작가의 품에 안기는 귀여운 꼬마 아가씨도 있다.

1978년 〈꿈꾸는 식물〉 출간부터 근간 〈코끼리에게 날개 달아주기〉까지 때로는 생명력을 뿜어내는 강렬한 메시지로, 때로는 고달픈 청춘들을 보듬는 따뜻한 응원을 아우르며 35년 문학의 길을 꾸준히 걸어온 이외수 작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청춘이나 영혼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작가가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가 계속된다면, 팍팍한 이 세상은 감성 가득한 곳으로 푸근해질 수 있을 것이다. G

글 · 박혜미 (자유기고가)



화천군청

'설맞이 구제역 피해지역 특산품 직거래 장터'를 찾은 이외수씨.

슈주 이특 "업무보고 받으러 왔어요~"

문화부 업무보고, 일반 국민들에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바꿔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초 각 실·국장이 장관에게 하던 업무보고를 올해부터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바꿨다. '모든 정책은 현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우선 KTV(한국정책방송)부터 황금시간대에 국산 애니메이션 방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월 10일 서울 구로에 위치한 동우 애니메이션에서 열린 '2011 콘텐츠 정책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국산 애니메이션이 국내에서 오히려 홀대받고 있다. 노출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콘텐츠 관련 학계, 업계, 일반 국민 80여 명이 참석한 자리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초 각 실·국장이 장관에게 하던 업무보고를 올해부터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바꿨다.

'모든 정책은 현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업무보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정책 국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한창완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토론이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대표작 '뽀로로'를 성공시킨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는 "해외 수출 때 바이어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국내 시장에서의 시청률과 매출"이라며 "아쉽게도 국내에는 우수한 콘텐츠의 소비자 접근 채널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애니메이션에 관한 한 미디어가 일방적인 (노출)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KTV 황금시간대에 국산 애니 틀겠다"

김영두 동우 애니메이션 대표 역시 "케이블 TV의 황금시간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수입 애니메이션"이라며 "국가 주도로 어린이 TV를 만들어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정병국 장관은 이에 대해 "방송시간대 확보를 위해 정책방송인 KTV부터 앞장서겠다. 그렇게 되면 KTV의 시청률도 올라갈 것"이라며 "이 역시 정책적인 측면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 밖에도 ▲영화, 게임, 만화 등 장르별 정책 ▲금융 투자, 인력 양성, 수출 진흥 등 기능별 정책 ▲콘텐츠산업 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오갔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그동안의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단말기와 네트워크 사업 위주로 발전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콘텐츠 산업이 근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문화부가 범부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온차트 널리 알리자" 제안도 잇따라

콘텐츠 산업의 동반성장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영철 중소기업 콘텐츠특별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콘텐츠 산업은 동반성장의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돼 왔다"며 "대중소 협업모델을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취약점인 유통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3D 미디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최용석 빅아이엔터테인먼트 대표는 "'토이스토리' 같은 3D영화 한 편의 제작비가 문화부의 한 해 예산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며 재원 마련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박현태 소빅창투 대표의 제안도 잇따랐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가 수출돼 인기를 끌면 제조업체는 고급 이미지를 덤으로 얻게 되는 등 무형의 수혜를 입게 된다"며 "국가 재원으로 한계가 있다면 대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부나 메세나 차원이 아닌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투자의 필요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이특이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그룹들이 일본 오리콘 차트의 상위권에 랭크만 돼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다"며 "가온차트 같은 대한민국의 가요 차트들을 널리 알려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디밴드 육성 같은 음악 분야의 창작기반 확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임진모 음악평론가는 "음악 분야의 비주류에도 시선을 돌려야 한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시설 보수 등을 통해 마음껏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잠재력 있는 음악 밴드 발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2월 10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동우 애니메이션에서 열린 2011 콘텐츠 정책 대국민 업무보고에 참석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학계, 업계, 일반국민 40여 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 20여 명,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게임 분야에서는 송병준 게임빌 대표, 박성호 NHN 이사, 안인숙 넥슨 이사 등이 참여해 사전심의로 인해 스마트폰용 게임을 국내 유통시키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오픈마켓에 대한 문제점과 '셧다운 제도'와 같은 게임규제로 인해 게임물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오도되는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셧다운 제도는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밤부터 아침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게임을 사행성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며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생을 마감한 고 최고은 작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콘텐츠 수요자뿐 아니라 제공하는 입장에서의 안정망도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기술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데 반해 법규는 여전히 아날로그적"이라며 "스마트 시대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콘텐츠 분야 규제 개선 사항 및 법령 개정 사항을 홈페이지(www.mcst.go.kr)에 공개하고, 제안 및 건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10일 콘텐츠 정책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모든 실·국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G

공감코리아 제공 (www.korea.kr)

칠족령 · 화절령 · 대관령

원시림 · 수직절벽들 사이로 **수줍은 '옛 친구' 마중 나온다**

강원도에 걸어 볼 만한 옛길이 3곳 있다. 칠족령과 화절령, 그리고 대관령 옛길이다. 그다지 험하지 않고 풍경이 수려해 초보자라도 별 부담없이 찾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깃들어 있다.



등산객들이 대관령 선자령 능선을 따라 눈꽃 트레킹을 즐기고 있다.

칠족령 동강 조망 전망대 코스

강원 평창군 미탄면과 정선군 신동읍 경계에 백운산(8백82미터)이 있다. 정상 지점에 전망대가 마련돼 있는데 이곳은 동강 줄기를 조망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손꼽힌다. 전망대에 서면 마을을 산태극 수태극으로 휘돌아 나가는 동강의 모습이 발 아래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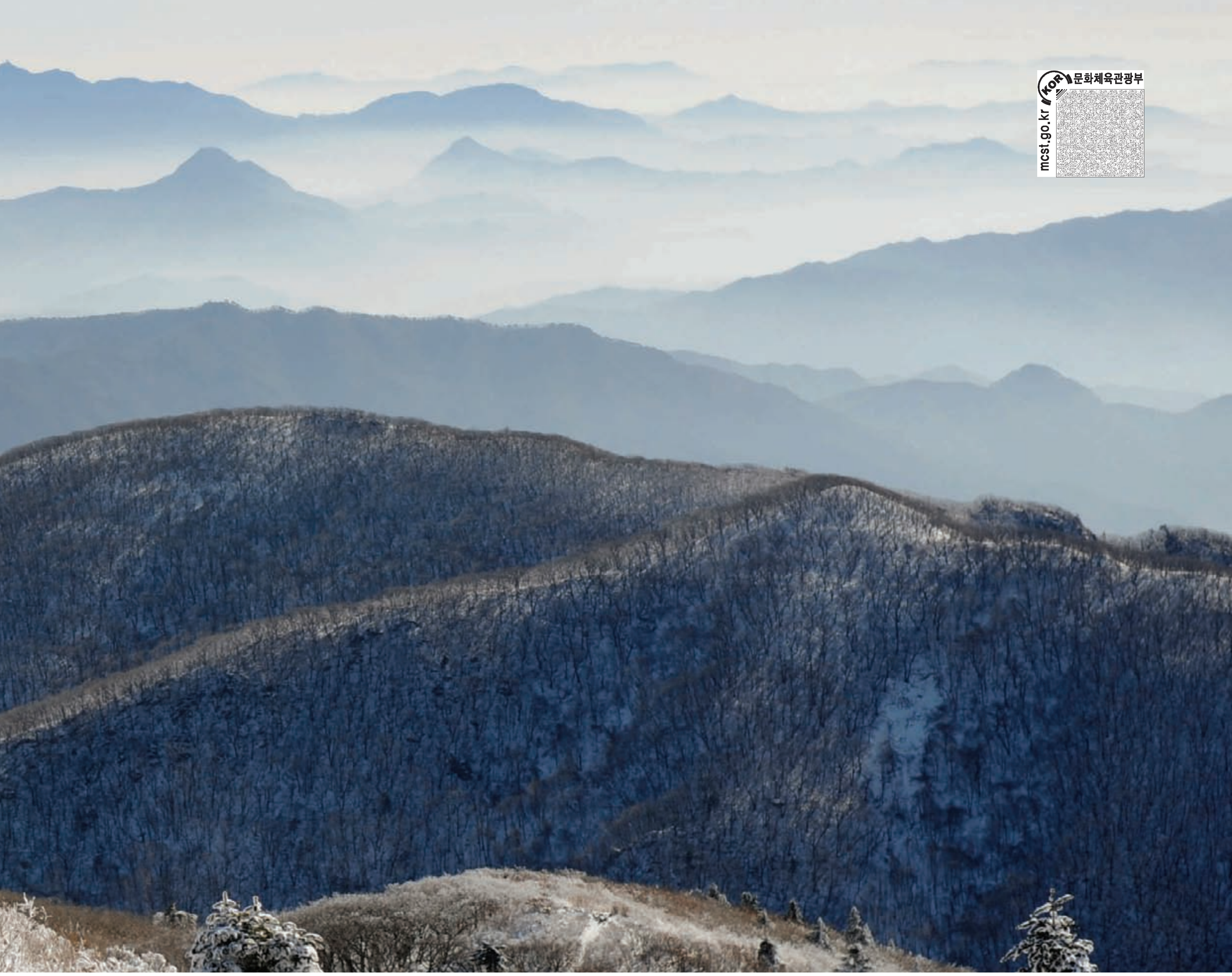
출발점은 미탄면 마하리 문희마을이다. 동강 래프팅이 시작되는 진탄나루에서 오른쪽으로 동강을 보며 4킬로미터 정도 들어가면 문희마을. 여기에서 백운산 능선을 따라 제장마을까지 간다.

문희마을에서 전망대까지는 약 1.7킬로미터. 길의 처음은 완만한 숲길이다. 굴참나무와 신갈나무 낙엽이 바닥에 수북하다. 폭 1미터도 안되는 길이다. 자칫 낙엽이 쌓인 곳을 밟으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중간 지점에 성터와 돌탑이 있는데 이곳에서 20~30분 즈음 오르막길을 오르면 전망대가 나온다.

전망대에 서면 하늘벽이 깎아지른 듯 서 있다. 하늘벽은 절벽의 품새가 높고 날카로워 하늘을 찌를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 붙었다. 하늘벽을 지난 동강은 하방소를 거친 뒤 다시 바새마을을 에워싸고 굽이쳐 돌아 나간다.

왼쪽 아래 제장마을과 정면의 소사마을, 그 너머 연포마을까지 물가에 자리한 마을 풍경이 그림 같다. 전망대에서 바닥이 보일 정도로 강은 맑다.

여기서부터는 한숨 돌린다.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10여 분 가면 진짜 재미가 시작된다. 가파른 내리막길이 시작되는데 90도 가까운



급경사 바윗길이다. 아이젠을 착용하고 내려간 등산객이 많은 까닭인지 바위가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다. 로프를 잡지 않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다.

칠족령이라는 지명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 제장마을에 이 진사가 살았다. 하루는 이 진사가 기르던 개가 옻나무액을 담아 둔 통을 엎고 사라졌는데 옻나무 진이 묻은 개 발자국을 따라 좇아 올라가 보니 금강산에 버금가는 황홀경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때문에 옻 칠(漆), 발 족(足) 자를 써서 칠족령이란 이름이 생겨났다.

칠족령에서 내려서면 제장마을이다. 제장마을은 장이 설 만한 곳이라는 뜻이다. 등산로가 끝나는 곳에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지어 놓은 너와집이 있다.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은 칠족령 숲길의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인정해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숲길 부문 공존상'을 수여했다.

화절령 태초의 원시림 풍경 숨겨둬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뒤편에 운탄길은 과거 석탄을 운반했던 길이라 운탄(運炭)이란 이름이 붙었다. 백운산 두위봉을 지나는 이 길들은 정선 신동의 예미까지 이어지는데 곳곳의 갱도를 잇고 달리느라 거미줄처럼 연결된 까닭에 전체 길이가 80킬로미터를 넘는다.

한때 석탄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는 탄더미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이 길을 다녔겠지만 10여 년 전부터 운탄길에서 석탄차들은 사라졌다. 정선과 태백, 영월 일대의 탄광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서부터다.

몇 해 전부터는 이 길이 트레킹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해발 1천~1천2백미터 고지에 자리한 탓에 풍광도 제법 좋다. 암팡진 산자락을 보며 걸을 수도 있고 폐부에 스미는 공기도 상쾌하다. 운탄길을 만들 때 심었다던 낙엽송들은 어느덧 수령 40년을 훌쩍 넘긴 큰나무들이 되어 걷는 이의 옆을 아늑하게 감싸준다.





선자령 가는 길, 케이티 통신소에서 바라본 동해바다. 대관령 옛길 트레킹의 출발점이다.





화절령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운탄길 트레킹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운탄길 끝자락에 자리한 화절령이란 고갯길은 마냥 걷기 좋은 길이다. 화절령이란 이름은 봄이면 처녀들이 꽃을 꺾으며 넘던 길이란 뜻에서 왔는데 '꽃꺾이재'로도 불린다. 운탄길이 수많은 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힌다.

화절령은 경사가 급하지 않다. 옛날 '자무시'라고 불리던 GMC 트럭이 석탄을 싣고 다닐 수 있도록 능선을 따라 길을 냈기 때문이다. 산허리를 끼고 도는 길은 쭉쭉 뻗은 침엽수림 사이를 지난다. 바람 냄새도 향긋하다. 가족과 함께 겨울산의 풍경을 즐기며 여유 있는 걸음으로 산책하듯 걸어도 1시간30분~2시간이면 족히 닿을 수 있다. 산중에 나 있지만 모나지 않고 둥그스름하다.

화절령에서 한 발짝 비켜 선 곳에 도롱이 연못이라 불리는 웅덩이가 있다. 직경 1백미터 남짓이다. 지하갱도가 꺼져 물이 차오르면서 만들어졌다. 연못 주위로 키 높은 낙엽송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고 연못에는 탄부들이 잘라낸 이끼 덮인 나무들이 물 위에 떠 있다. 하늘과 숲을 담은 연못의 모습이 마치 태초의 원시림을 보는 듯하다. 막장의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아내들이 도롱뇽을 방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대관령 옛길 눈꽃 트레킹으로 유명

대관령 옛길은 옛길 걷기 코스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다. 봄부터 겨울까지, 사시사철 걷기 여행자들이 몰려든다. 그만큼 운치 있고 걷기 좋기 때문일 것이다.

대관령에는 옛길이 2개 있다. 흔히들 과거 고속도로였던 길을 옛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원조' 옛길이 있다. 옛



칠족령 전망대에서 바라본 동강. 뱀이 똬리를 틀듯 크게 굽어져 가는 물줄기가 장관이다.

대관령 휴게소 뒤편의 선자령 정상에서 강릉 방향으로 1킬로미터쯤 더 내려가면 진짜 옛길이 나온다.

옛날 횡계와 강릉 파발역의 중간지점인 반정(半程)에서 대관령박물관이 자리한 강릉시 어흘리까지 5킬로미터 구간이다. 트레킹은 반정에서 강릉시 어흘리까지 내려가는 방법과 어흘리에서 올라오는 방법이 있다. 반정에서 박물관까지 편도로 내려가기만 하면 1시간40분, 박물관에서 반정까지 올랐다가 다시 하산하면 4시간 정도면 족하기 때문에 왕복 트레킹을 시도해도 무리가 없다.

길은 넓다. 서너 명이 어깨동무하고 걸을 수 있을 정도다. 지금 이 길에는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길은 스펀지를 깔아놓은 듯 푹신하다. 가슴속 깊이 밀려드는 숲 냄새도 싱그럽다. 옛 사람들은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까지 이 길을 고단하게 발품을 팔아 가면서 넘었다.

길 중간에는 옛사람들이 목을 축이던 주막터가 있다. 주막터를 중심으로 윗길은 구불구불한 비탈길, 아랫길은 비교적 올곧게 뻗은 평지이다. 눈이 많이 쌓이면 완만한 내리막에서 주저앉아 오궁(오리궁둥이) 썰매를 즐길 수 있다.

대관령 부근에는 트레킹 명소가 또 있다. 대관령 북쪽 황병산~오대산으로 이어지는 선자령고갯길이다. 구 대관령휴게소에서 북쪽의 대관사를 거쳐 해발 1천1백57미터의 선자령에 올랐다가 내려온다. 왕복 5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눈꽃이 화려해 심설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산악인들은 선자령~대관령~능경봉을 함께 묶어 겨울철 심설 산행을 즐기는 '눈꽃 트레킹 벨트'로 삼고 있다. G

글과 사진 · 최갑수 (시인 · 여행작가)

여·행·정·보

교통&먹을거리 칠족령 중앙고속도로 제천IC로 나와 영월 방면 38번 국도를 탄다. 영월을 지나 신동읍 방향으로 가면 된다. 동강 고성안내소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동읍 예미리에 **정원광장**(033-378-5100)에서 손두부, 청국장, 곤드레밥 등을 맛볼 수 있다.

화절령 중앙고속도로 제천IC에서 38번 국도를 타고 영월을 거쳐 정선 하이원리조트(강원랜드)까지 간다. 왕복 4차선으로 포장돼 있다. 하이원리조트 매립지 주차장 뒤편에 등산로가 있다. 화절령~산죽나무길~산철쭉길~마천봉~골프장을 잇는 길은 4시간 코스다. 코스에 따라 2시간, 3시간 코스도 있다. 하이원리조트(www.high1.com)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588-7789.

대관령 영동고속도로 횡계IC로 나와 우회전, 1킬로미터 정도 가다 보면 '대관령 옛길'이라는 표지판이 나타난다. 표지판을 따라 좌회전해 가면 대관령 휴게소다.

횡계 일대에 황태로 유명한 집이 많다. **황태회관**(033-335-5795)에서 황태해장국, 황태찜, 황태구이 등을 낸다. **납작식당**(033-335-5477)의 오삼불고기도 별미. 오징어와 삼겹살을 고추장양념에 버무려 철판에 구워 먹는다.

포토 포인트 칠족령은 전망대가 사진 찍기 좋다. 강의 모습을 다 담기 위해서는 20밀리미터 이하의 광각렌즈가 필수. 화절령은 저물 무렵을 노려 보자. 길 너머 바라보이는 산의 능선이 아름답다. 대관령 옛길에는 낙엽이 수북하다. 낙엽을 클로즈업해 찍어 보는 것도 좋을 듯.

“와우! 한국 전통놀이 참 재미있구나”

아주 옛날부터 설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별한 하루였답니다. 하지만 빌딩에 둘러싸인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 고유의 설 문화를 맛보기란 쉽지 않죠.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매년 설 연휴마다 ‘남산골 설날 한마당’이 펼쳐지는 남산골한옥마을이 있으니까요.

색동저고리를 입고 한껏 멋을 내고 싶어지는 설날, 남산골한옥마을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남산골에서 처음으로 만난 친구들은 한국어 삼매경에 푹 빠진 아시아 친구들이었습니다.

경기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싸시완(태국)과 메모나(파키스탄)는 “축제에 와보니까 모두 행복해 보여서 저까지 행복해지고 있어요. 한국문화를 더 깊게 알고 싶으면 남산골한옥마을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랑 윷놀이를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여기에선 여러 가지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도 꼭 와보길 바라요”라고 말하는데, 한껏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서 만난 외국인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모습이 정겨워 보인다.

소중한 추억이 된 남산골한옥마을 ‘설날 한마당’

작년 12월에 한국에 왔다는 새내기 유학생 나오미(일본)와 유코(일본)는 인터넷에서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들을 검색하다가 남산골한옥마을을 찾았다며 뿌듯해 했습니다.

“일본에선 설날에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아서 걱정했는데, 한국은 이렇게 구경할 거리가 많아서 너무 즐거워요. 연휴 끝나기 전에 또 오려고요.”

저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일본 친구들에게 한국의 멋을 열심히 소개하며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친구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온 친구들도 많았는데요. 단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에디트와 노호(프랑스) 부부는 사랑하는 아이에게 다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아시아를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한국의 설날은 가족을 위한 날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축제의 주인공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한국의 다른 꼬마들과 한국 전통놀이를 즐기고 사진을 찍으며 재미있어 하는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날 것 같아요.”

저는 남산골한옥마을이 이들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어준 것 같아 너무 뿌듯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유쾌한 삼총사 다한(터키), 패트릭(독일), 필립은 독일과 다른 한국의 놀이 문화에 매료된 눈치였는데요. 팽이치기를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남산골한옥마을에는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궁금해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자주 찾아온답니다. 너무 익숙하게 느껴져 잊고 있었던 우리의 문화를 기억하러, 그리고 그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 친구를 만나러 한옥마을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더불어 외국인 친구들과 한국문화로 소통하는 기회도 놓치지 말자고요! G

글과 사진 · 정하늘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

남산골한옥마을 연중행사 안내 http://hanokmaeul.seoul.go.kr

이 코너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단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입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찾아낸 재기발랄한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세요.
자세한 기사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블로그
도란도란 문화놀이터(http://culturenori.tistor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글과 그림 · 최영순



사람은 함께 웃을 때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 – 레오 버스카글리아

〈울지마 톤즈〉의

웃고 있는 이태석 신부

정재형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이 시대의 영웅상은 어떤 것일까? 영화 속에 나오는 무수한 영웅들, 특히 고대 헤라클레스 같은 초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영웅들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그보다는 서민적인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영화속 영웅상도 시대를 따라간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그 많은 영웅상 가운데 최근 영화 〈울지마 톤즈〉에 등장한 고 이태석 신부 같은 이는 최근 변화된 현대 영웅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현대인의 문제는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인간이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해 간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는 점점 신화가 되어 가는 실정이다. 이태석 신부는 48세의 짧은 생을 살다 간 사람이지만 그의 헌신성은 이제 시간을 초월하는 영웅적인 삶이 되었다.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는 시기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 영화만큼 화제를 불러일으킨 사건도 없었다. 그 어떤 내로라하는 감독의 영화보다도 이 다큐멘터리 속에 등장한 이태석 신부의 삶만큼 관객들을 감동시킨 영화는 없었다.

이 한 편이 가져다준 기적은 앞으로 영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까지도 제시해 줄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착한 점은 내용이 진지하다는 것이고 소중하다는 것 때문이다.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아니다. 오로지 이태석 신부라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 때문인 것이다.

이태석 신부는 48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헌신성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웅적인 삶이 되었다.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 이유는 자신의 삶을 돌아본 후 타락한 자신에 대한 준열한 비판의식에서 나온 눈물이었으리라.

그러나 관객들의 반응은 아이러니하다. 이 영화가 특히 지금 시대 한국에서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의 위대함보다는 관객들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관객들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이태석 신부와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돌아본 후 타락한 자신에 대한 준열한 비판의식에서 나온 눈물이었으리라는 추측 때문이다. 눈물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 상대방이 너무 애처로워 우는 경우와 자신의 처지가 불쌍한 나머지 스스로의 설움에 겨운 눈물이 그것이다. 이번은 후자에 해당한다. 관객 자신이 철저히 잘못 살아왔다는 반성의 눈물인 것이다. 물질적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이제 살 만하니까 자신이 이뤄 논 일이 하나도 없다는 자책감과 허무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측은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관객들의 이런 감정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고해성사와 흡사해 보인다. 관객들은 이태석 신부의 성스러운 삶에 감동받은 나머지 마음속으로 조용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이리라. 그 순간 잠시나마 관객들의 마음은 순도 있게 정화되고 순수해졌을 것이다.

이태석 신부의 희생적인 삶은 하와이 한센인들과의 삶 속에서 선종한 벨기에 신부 다미안과 다를 바 없으며 역시 아프리카에서 선술을 펼친 의사 슈바이처의 길을 따라간 것이다. 그들의 원조는 물론 예수나 석가와 같은 성인의 길일 것이다.



현대의 영웅 이태석 신부는 조용히 행동하는 지성이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일을 묵묵히 실천하는 영웅, 그게 〈울지마 톤즈〉가 확인시켜 준 이 시대 새로운 영웅상일 것이다. G



월 3만원의 해외아동 1 : 1 결연후원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약속이며 기적입니다.

해외아동 결연후원 신청 (매월 3만원)

1599-0300 www.gni.kr

해외아동과 결연을 맺으시면 아동사진과 소개카드, 결연후원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굿네이버스는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부여한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협의지위를 획득한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 굿네이버스